

# 대전세종포럼

## 기획특집 대전세종 경제동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 대전세종지역 경제 및 산업 추이와 정책방향
- 혁신생태계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변화방향
-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
- 대전·세종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 대전세종 지역축제를 통한 경제효과 및 제고방안
- 대전 사회적경제 주도 블록체인 기반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 전략

## 시민행복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기관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대전·세종

DAEJEON  
SEJONG  
FORUM

#### 미래지향적 도시정책 연구 선도

- 도시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 연구
- 연구지원체계의 선진화
-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

#### 정책기여도가 높은 연구성과 생산

- 활용도 높은 맞춤형 정책 개발
-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지원
- 시민 참여형 정책네트워크 강화

####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공동체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회계시스템 확립
- 소통, 신뢰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 경영관리시스템 혁신

#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70호

대전세종포럼

제 70호

대전세종 경제동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 Contents

- 06 대전세종지역 경제 및 산업 추이와 정책방향  
임성복,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 22 혁신생태계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변화방향  
최종인 한밭대 산학협력단장, 혁신클러스터학회 회장
- 36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  
양봉석 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
- 54 대전·세종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김진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 70 대전세종 지역축제의 경제적효과 검토와 활용방안  
김동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술연구교수
- 90 대전 사회적경제 주도 블록체인 기반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 전략  
김성훈 사회적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 1장

## 대전세종지역 경제 및 산업 추이와 정책방향

임성복,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 대전세종지역 경제 및 산업 추이와 정책방향

임성복,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FORUM

## I. 들어가며

대전·세종은 국가의 행정, 과학, 국방, 교육의 중추도시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성장지대로서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7년이 경과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2단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동안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부동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기타 서비스업 분야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유입과 지역총생산 증가 등 경제, 산업 부문의 성장과 연계되어 있다.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의 국가적 현안사업들이 향후 마무리 되면서 인접해 있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때, 양 도시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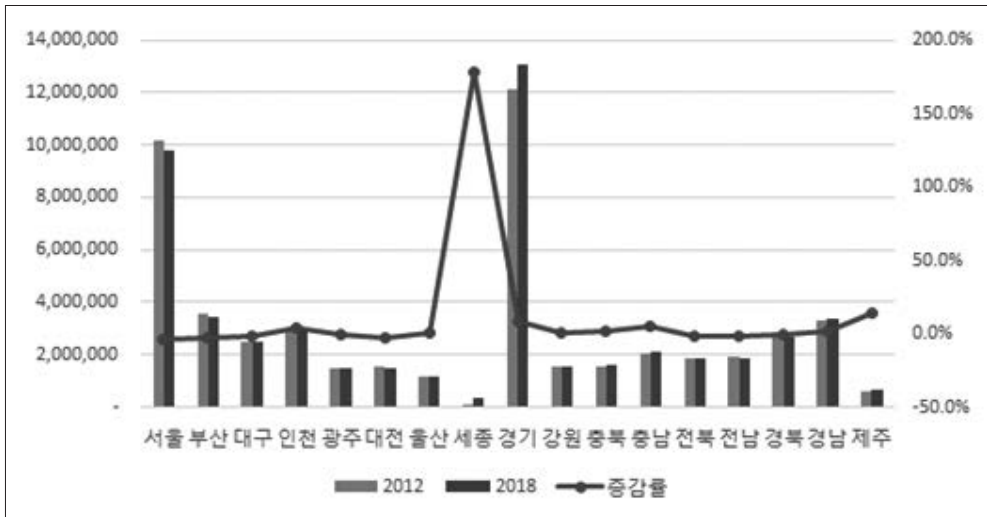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대전·세종 지역의 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의 성장 추이를 분석하고, 최근 중요한 정책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신산업 육성, 일자리, 과학기술, 상생협력을 중심 과제로 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Ⅱ. 대전·세종의 지역경제 관련 추이

### 1. 인구

대전시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1,524,583명에서 2018년 1,489,936명으로 34,647명(-2.3%)이 감소하였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비중은 2.99%에서 2.87%로 0.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113,117명에서 2018년 314,126명으로 201,009명이 증가하였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비중은 경기도가 1.50%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세종시가 두 번째로 0.22%에서 0.61%로 0.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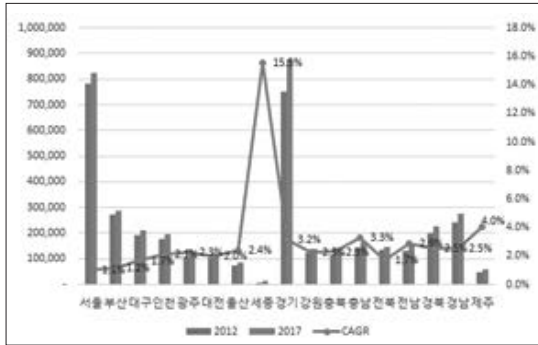
〈그림 1〉 인구 추이(2012, 201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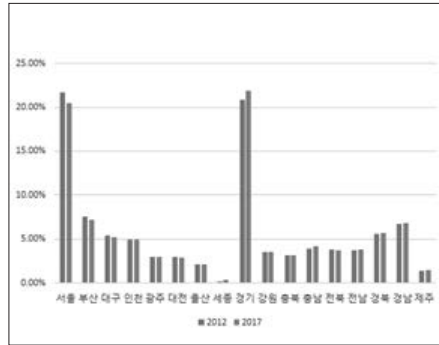
### 2.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대전시의 사업체수는 2012년 104,609개에서 2017년 115,423개로 10,814개(연평균 2.0%)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전국비중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2.90%에서 2.87%로 0.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사업체수는 2012년 6,640개에서 2017년 13,668개로 7,028개가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 전국 비중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경기도가 1.0%p로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세종시가 세 번째로 0.18%에서 0.34%로 0.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사업체수 추이(2012,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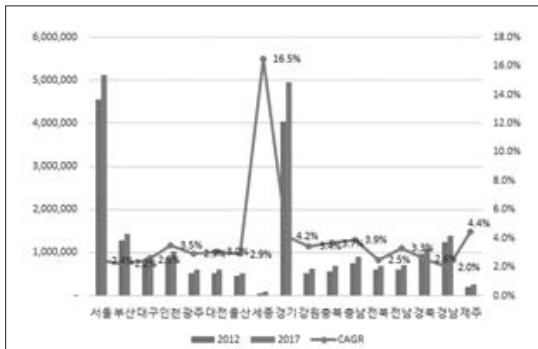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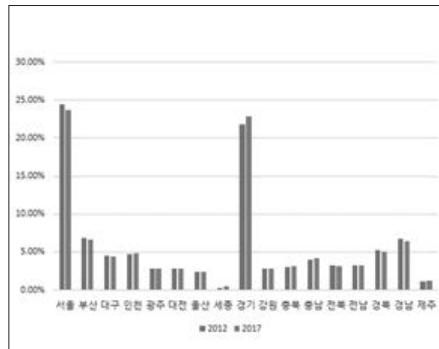
〈그림 3〉 사업체수 비중 추이(2012, 2017)

대전시의 종사자수는 2012년 521,281명에서 2017년 605,742명으로 84,461명(연평균 3.0%)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전국비중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2.81%에서 2.80%로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종사자수는 2012년 46,512명에서 2017년 99,827명으로 53,315명이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전국 비중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경기도가 1.14%p로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세종시가 두 번째로 0.25%에서 0.46%로 0.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종사자수 추이(2012, 2017)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

〈그림 5〉 종사자수 비중 추이(2012,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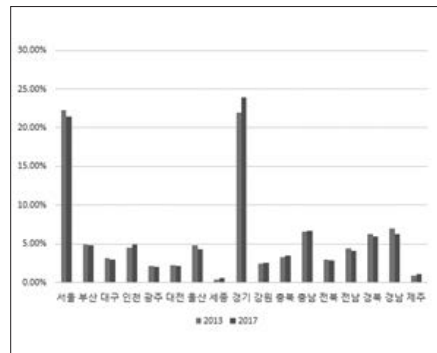
### 3.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총소득

대전시 지역내총생산은 2013년 31조 4,560억원에서 2017년 37조 3,030억원으로 5조 8,480억원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 전국 비중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2.20%에서 2.15%로 0.04%p 감소하였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은 4.4%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를 차지하였다.

세종시의 지역내총생산은 2013년 5조 8,470억원에서 2017년 9조 7,770억원으로 3조 9,310억원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2.0%p가 증가하였고, 세종시는 세 번째로 0.41%에서 0.56%로 0.16%p가 증가하였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은 세종시가 13.7%, 제주도 8.1%, 인천 6.8%, 충북 6.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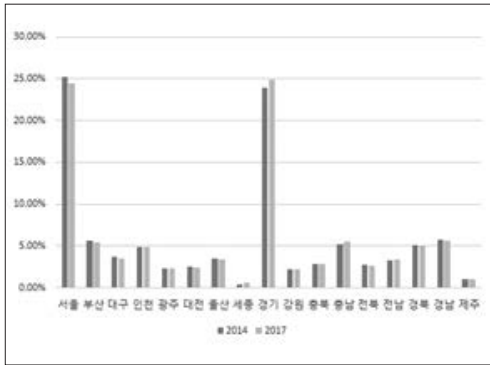
〈그림 6〉 지역내총생산 추이(2012,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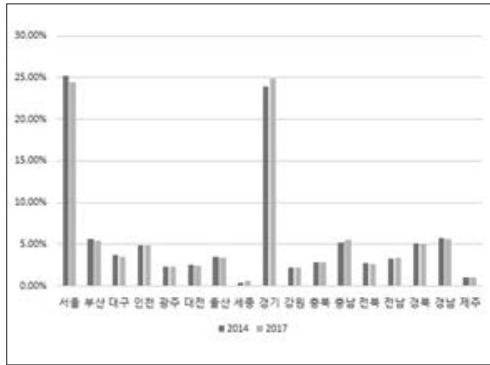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보도자료 각 년도  
 〈그림 7〉 지역내총생산 비중 추이(2012, 2017)

대전시의 지역총소득은 2014년 37조 3,000억원에서 2017년 42조 6,000억원으로 5조 3,000억원이 증가하였다. 전국대비 지역총소득의 비중은 2.49%에서 2.45%로 0.05%p 감소하였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은 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를 차지하였다.

세종시의 지역총소득은 2014년 5조 7,680억원에서 2017년 10조 2,170억원으로 4조 4,490억원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지역총소득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0.98%p가 증가하였고, 세종시는 세 번째로 0.39%에서 0.59%로 0.20%p가 증가하였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은 세종시가 21.0%, 제주도 8.7%, 충남 7.2%, 충북 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지역총소득 추이(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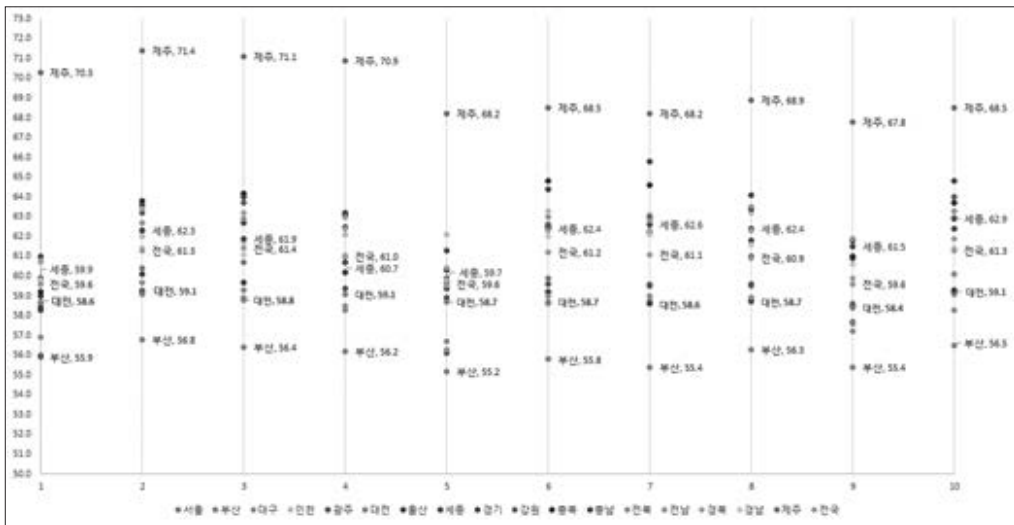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보도자료 각 연도  
 〈그림 9〉 지역총소득 비중 추이(2014, 2017)

### 4. 고용률

대전시의 고용률은 2017년 1분기 58.6%에서 2019년 2분기 59.1%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로는 0.70%p, 전년 동기 대비로는 0.40%p 증가하였다.

세종시의 고용률은 2017년 1분기 59.9%에서 2019년 2분기 62.9%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강원으로 1.4%p 증가하였고, 세종시는 세 번째로 0.5%p 증가하였다.



〈그림 10〉 고용률 추이(2017년 1분기 ~ 2019년 2분기)



대전·세종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분야 지표들을 통해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전시의 인구는 세종으로의 이동에 따라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수, 종사자수,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고용률 또한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대전의 산업특성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은 제조업의 성장세로, 대전 제조업의 '07-17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수 1.92%, 종사자수 2.51%, 출하액 6.85%, 부가가치 7.35%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지수(2015=100) 역시 2017년 108.4로 전국(104.6) 보다 높으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한편 대전시의 경우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산자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2008년 18.71%에서 2017년 21.33%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역시 2008년 20.92%에서 2017년 22.52%로 상승하였다.

세종시의 경제 및 산업의 규모는 전국과 비교하여 아직은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 고용률 등 전반적인 지표의 성장률은 전국보다 훨씬 높아서 세종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규모 측면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가 크게 증가하였고, 성장률 측면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증가하였다.

### Ⅲ. 대전·세종지역 발전계획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의 대전·세종지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 발전계획은 '더불어 행복한 미래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지역 인재-일자리 선순환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차별없는 복지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생명이 숨쉬는 도시, 자연이 살아 있는 즐거운 생태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성장 도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플랫폼이 조성되는 미래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마련, 창조와 융합의 매력적인 문화기반 마련, 차별없이 누구나 누리는 보건의 복지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지역소재 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창조와 융합의 매력적인 문화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성장,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거점 육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공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차별없이 누구나 누리는 보건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 지역중심 보건의복지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도심 재생을 통한 기존 도심 거점 강화, 물적·인적자원의 공유와 순환을 통한 강소생활권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안전하고 불편 없는 환경 구축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도심 재생을 통한 기존 도심 거점 강화를 위해서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 활성화, 지역과 지역주민의 주도·상생,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적·인적자원의 공유와 순환을 통한 강소생활권 발굴과 관련해서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 균형발전 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인근 지자체간 상생 협력,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역량 강화 및 활력 촉진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사업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덕 R&D특구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대덕 R&D특구 시즌2 사업 전개를 위해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업친화형 융복합 플랫폼 조성, 과학벨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과학벨트 연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지역산업 3대 혁신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혁신, 거점혁신, 기반혁신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산업생태계 견인, 혁신성장 4대 거점 육성, 인력·투자·마케팅 등 스마트 지원 프로그램 가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위해서 국유지 토지개발,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 있는 산촌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내불균형 해소 전략을 위해서 도청부지 활용 문화예술지구 재생 추진 및 국가도시정원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추진, 역세권 미래 철도 클러스터 조성, 드림하우징 3천호 공급 등을 통한 공간분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산업분야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업/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동부권 제2대덕밸리 조성,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발전계획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삶의 질이 높은 품격도시,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는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통해 맞춤형 정책수립과 공직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평생학습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소재 학교지원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세종시 도제학교 운영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세종시청 광장을 시민 레저공간으로 조성, 장욱진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 한림제지 문화재생, 세종시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는 디지털세종문화대전 편찬, 관광안내지도 제작, 산성 문화재 관광자원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 취약지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미세먼지정보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중심의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정신건강 복지관리 강화, 시민안심보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원 확대, 도시재생 뉴딜 지원 확대, 거주강소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지원에서는 농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 정

주기반 제고를 위해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가축분뇨·음식물 친환경 에너지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농상생을 위해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한 '도도리파크 조성', 세종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세종시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교육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시스템 고도화도 중요한 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치원 청춘문화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책 추진, 공동주택 민관협업체 운영을 통해 뉴딜사업의 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종-대전간 광역철도 건설을 검토하고,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거주강소지역을 만들기 위해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연구,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 등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중심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 신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시민주권대학 운영, 마을단위 공동체 지원확대 나갈 예정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읍·면·동 재정조정권부여를 통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읍·면·동 단위 마을계획수립,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16세 확대, 읍·면·동 주민공동체 조례·규칙제안권을 부여하여 주민자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지역산업 3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개헌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 이전 정부기관 추가 이전, 국제기구 유치로 통한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수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KTX 세종역 신설 검토와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관점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기반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스타기업 육성지원, 창업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유치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도시를 조성

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추진본부 설립, 빅데이터 전문관 신설,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IV. 지역경제 정책 방향

### 1. 신산업 육성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SW융복합 생태계 구축, 융복합 영상·문화·스포츠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IoT기반 스마트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구축, 공공기술 연계를 통한 벤처창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조성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산출되는 각종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거점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과학벨트 기초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의료·바이오 분야 융합연구와 치료, 핵심기술 개발 국산화를 꾀해 나가도록 하고, 유전자 의약산업 육성, 미래핵심소재 클러스터 및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대전이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협회 그리고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 병원, 마이스산업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분야와 함께 도소매, 문화예술 분야 등 서비스분야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조업에 있어서도 자동차부품, 정밀소재, 바이오 및 제약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관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내에서 기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일자리

대전시의 일자리는 향후 4차 산업혁명 대응 대덕특구의 비전이 가시화되고 급속한 상용화의 속도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친화형 기술이전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추진에 따른 해당 산업분야 및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운영과 기업육성을 위한 인력, 투자,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들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200여개 기업 유치가 기대되는 안산첨단국방융합단지 조성,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을 통한 각종 지식산업센터 조성,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와 외국인 투자유치, 특구 융합공동 연구센터 조성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경력직 및 신규 젊은층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 일자리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행정 및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와 지원인력, 전문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의료, 마이스산업, 문화예술 분야 등 지식서비스에 대한 일자리와 함께 부동산, 도소매, 음식점업 등 일반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T 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분야와 연계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분야에 대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서비스 산업과 일반 서비스 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과학기술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고 과학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고, 과학기술의 비전을 실용화 측면에서 보다 극대화해 나가는 노력은 비단 지역을 넘어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중심적 역할에 해당한다.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보유한 과학기술 자산과 역량을 활용한 과학기술의 성과목표는 기초·원천 기술 사업화 체계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에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보다 명확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시

시스템 구축, 혁신바우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모델 설계, 민간 액셀러레이터 주도의 창업 및 투자보육 프로그램 기획, 대덕특구 중심의 다양한 혁신주체 간 통합 플랫폼 마련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혁신주체들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의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입지는 앞으로 의료 및 바이오와 첨단 소재,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기관, 기업연구소의 입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인프라와 투자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상생협력

경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대전과 세종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는 예상된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양 도시의 인구에 대해서는 통합적 인구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양 도시 간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교통망 확충과 이용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은 향후 한층 더 단일 생활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양 도시는 현재 대전이 보유한 과학기술과 교육의 인프라를 협력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양 도시가 보유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산업기반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인력양성 분야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대전시와 세종시가 환경, 에너지, 교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에서의 과학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주체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협력사업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지역이 신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과 지역 인재의 양성, 새로운 고용창출이 지속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 대전광역시(2019), 대전광역시 발전계획 2018-2022
  - 세종특별자치시(2019), 세종특별자치시 발전계획 2018-2022
  -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 10년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지식공감
  - 김성표(2018), 세종시 과학기술전략 수립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임성복(2017), 대전-세종권역의 혁신기술산업분야 상생발전적 방향, 대전세종포럼
  - 통계청(2018), 2017년 지역소득(잠정)
-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 2장

# 혁신생태계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변화방향

최종인 한밭대 산학협력단장, 혁신클러스터학회장

# 혁신생태계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변화방향

최종인 한밭대 산학협력단장, 혁신클러스터학회장

DAEJEON  
SEJONG  
FORUM

## I. 서론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식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 1%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과 함께 2019년 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그 우려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1% 줄면 일자리는 5~7만개 줄어든다고 하니 높은 청년실업이 가중될 걱정이 크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일정기간 신규일자리 공급은 줄어들며, 현재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미래의 일자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와 함께 점점 경직된 노동구조의 모습으로 신규일자리 창출을 꺼릴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혁신경제로 성장엔진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모방의 시대를 벗어나 창조와 혁신의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추격형이 아닌 창조형 경제에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롭고 과감한 R&D 투자와 '가늘고 긴'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을 사업화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 저성장의 시기에 필수 사항이 된 창업을 새롭게 활성화 하려면 과거와는 다른 창업 생태계 구축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곡을 넘어갈 징검다리도 필요하다.

생태계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 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체계이며, 모든 자연환경에 있어 모든 생물은 그물처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창업벤처 생태계도 벤처기업의 탄생,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때 필요요소로는 우수한 인재 확보, 높은 기업가 정신, 새롭고 유용한 기술 개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각 단계별 필요 자금 공급, 강한 창업 팀과 조직력 등이 있다.

창업 또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뉴벤처 크리에이션(2015)'을 쓴 Meyer and Crane은 앙트러프리너십(entrepreneurship)이란 '생각하고, 추론하며 행동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고민하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접근하며, 가치 창출과 가치 활용 목적을 균형 있게 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앙트러프리너십을 창업 또는 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앙트러프리너십을 창업이라고 정의할 경우,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연 위험이 따르는 창업을 강의하고 강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앙트러프리너십을 창업이라고 좁게 정의하지 말고, 기업가정신이란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창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조직 또는 대학에 이것이 필요한가, 성공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의문이 많으며, 따라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해석하고, 이를 '아이디어(idea)를 기회(opportunity)와 가치(value)로 바꾸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조직내 전 구성원들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며, 모두가 보유했던 가치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게 된다.

이같은 창업 생태계를 한 곳에 잘 갖춘 곳, 또는 그 잠재력을 보유한 곳은 바로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은 생태계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또는 주변의 방관자로 자리잡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학이 좀 더 혁신생태계와 혁신플랫폼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접근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의 창업과 혁신이 지역과 연계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전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창업 교육의 방향 : 순차방식과 통합방식

연간 수백억을 투자하는 창업교육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로 창업교육의 비중은 해마다 급증했지만, 그 효과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카우프만 재단의 회장을 10년간 역임하고 2011년 퇴임한 칼 쉬램 교수(시라큐스 대학)는 미국전역에 기업 가정신 강좌와 프로그램이 급증했던 것에 반해, 과연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교육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chramm, 2014).

창업의 걸림돌로는 사회문화적 장벽, 자금부족, 교육 부족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교육은 이를 극복하는 첫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창업 또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학제적인 프로그램과 200개에 이르는 센터들을 만들어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대학 내 학과간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창업 정신이 가르친다고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창업교육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졸업 후에 기업가정신과 창업에서 높게 나타날까? 연속창업가이자 교육자로서 카우프만 펠로우인 라이드아웃(Rideout) 박사는 그동안 창업연구 방법론을 조사하고 과연 그 결과가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설명하는지를 조사하였다. 2016년 봄 필자는 라이드아웃 박사와 수차례 인터뷰를 하였다. 그녀는 미국내 12개 '혁신 대학(Innovation University 2.0)'을 조사, 출간할 정도로 대학혁신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심층연구를 통해 창업교육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으며 대안으로 올바른 프로그램과 올바른 사람의 조합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세 가지 형태의 창업교육을 받고 졸업한 4,000명을 조사한 결과, 두 개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지만, 하나는 효과가 없었다. 효과를 보인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는 교육학 전문용어로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의 차이로 설명된다. 전자는 커리큘럼 중심의 강좌와 사례연구 등인데 반해, 후자는 도제식의 실습과 행동중심의 교육으로, 진정한 기업 가정신 및 창업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교육 방법론 못지않게 개인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 창업생태계와 긴밀한 협력도 빼놓을 수 없었다.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이론적 틀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경력이론 등이 있다. 첫째, 우수사례로서 공대 3, 4학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사업아이디어를 내면서 기회로 변환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유치원을 찾아간 학생 팀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에서 '매트 피아노' 아이디어를 냈다. 즉 다양한 색깔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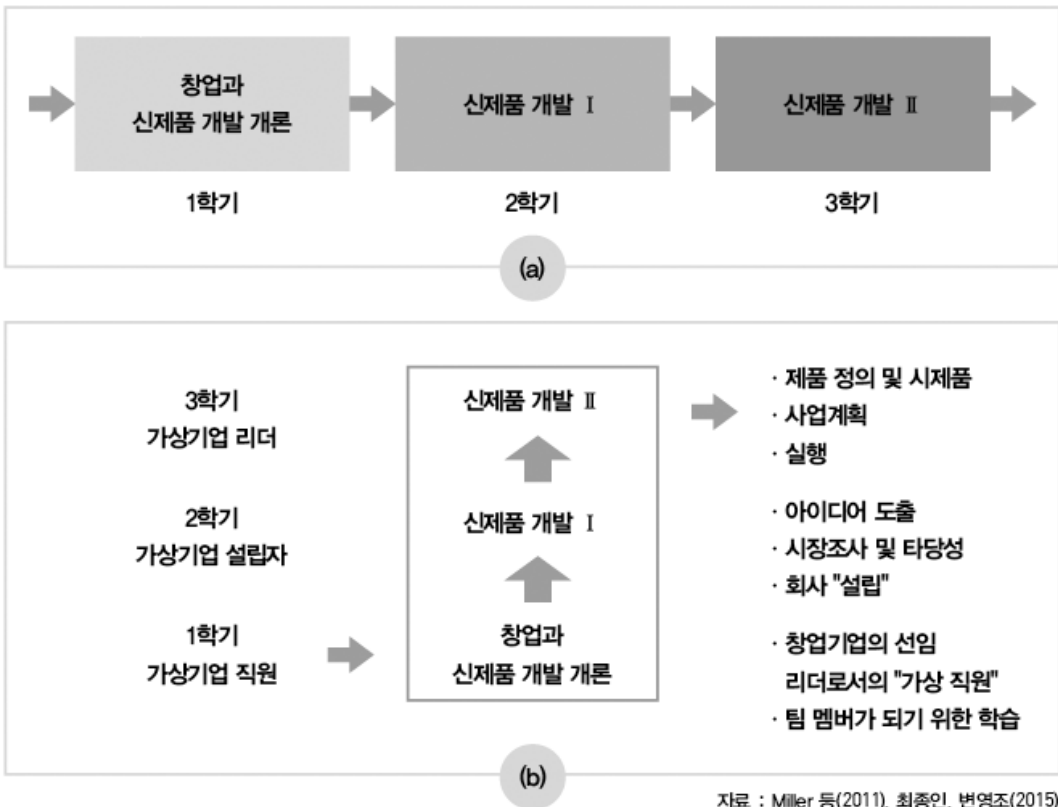
가진 매트를 만들어 피아노의 건반처럼 한 매트에서 다른 매트로 아이들이 뛰면서 다른 소리가 나오게 해 흥미롭게 음악과 함께 운동을 하게 만드는 효과이다. 둘째, 사례로서 미국 여성들 중 18%가 성폭행을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언더커버 컬러스(UC)’라는 회사를 창업한 NC State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클럽 등에서 만난 파트너의 음료에 약을 섞어 성범죄에 악용하는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을 확인하는 매니큐어를 개발하였다.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물속에 넣어 색깔변화로 약물여부를 파악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사업모델이다. 화학과 학생들이 실전 창업교육을 통해 사업모델을 만들고 화학전문가를 구해 시제품을 개발하고 최근 여성 비아그라를 개발해 FDA 승인을 받은 ‘스프라우트(Sprout)’사의 신디 화이트헤드로부터 엔젤투자까지 받았고 2018년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와 창업의 자신감, 경력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효과적 창업교육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강의와 특강, 사례 중심의 창업교육이 곁핥기식은 아닌지, 얼마나 자신감과 경력개발을 제공하는지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창업교육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기회를 발견한 뒤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때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교육자와 구성원도 공학, 디자인,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창업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이 훗날 성공하여 다시 후배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고, 대학에 펀드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업가정신으로 가득한 캠퍼스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학부의 전통모형과 통합모형의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시절부터 이공계 학생들에게 체계적 실감형 창업교육 실시함으로써 창업가정신과 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ideout and Gray, 2013; Miller 등, 2011). <표 1>에서 보듯 엔지니어링 창업교육의 형태는 3-4개의 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전통 모형(a)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로 세 과목을 상호연계된 도제식으로 하는 통합모형(b)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한 과목을 이수하고 그 다음을 시작하는 형태인데 반해, 후자는 학생들이 신참 멤버로 창업프로젝트에 들어가 시작 후 나올 때는 팀의 리더가 되게 만드는 모델이다. 새로운 형태의 창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일부 강의와 활동에서만 구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모든 학생이 같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통합적이고 경험적인 모델이야말로 성공적 창업 프로그램의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이 된다. 세부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최종인, 변영조, 2015).

첫째, 코스(창업 및 신제품개발 개론)에서 두 가지 별개의 코스를 제공하지만 상호 연결된 활동을 한다. 먼저 학생들은 가상 창업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상급학년 학생이 주도하는 회사의 일원이 된다. 이 아이디어는 학생들에게 스프링보드(발판)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이 지속적이 되도록 만든다. 또 다른 활동은 장남감 프로젝트로서 이는 빌라노바 대학의 코스에서 하는 방식인데, 학생이 고객과 제품 사이에서 관계를 하면서 팀 역동성, 창의적 문제해결, 기술전문성, 의사소통 스킬 등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3-4명씩 팀을 짜서 인근의 유치원을 방문하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행동(미술, 음악, 컴퓨터 사용, 읽기, 놀이게임, 레고 등)을 번갈아 가면서 관찰한다. 6주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것 같은 장남감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장남감들을 아이들이 갖고 놀면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한다. 학생 팀들은 자신의 장남감을 발표하고 상급 학년의 학생들과 경험을 공유한다.

〈표 1〉 엔지니어링 창업교육 구조 : 전통의 순차방식(a)과 통합방식(b)



자료 : Miller 등(2011), 최종인, 변영조(2015)



둘째, 코스(신제품개발론 I)에서는 창업벤처의 ‘업앤다운(up & down)’을 경험하게 한다. 학생들은 1차, 2차 자료를 조사하고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잠재시장을 예측하고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자신의 가설을 테스트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학생들은 대학도서관에서 ‘scavenger hunt(지정된 갖가지 물품을 사지 않고 무료로 빨리 구해 오는 게임)’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가상 프로토타입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한 학기동안 발표를 한다. 이는 창업 부트 캠프(boot camp)의 일종으로 실제 창업처럼 시장의 혹독한 평가를 경험하기도 한다

셋째, 코스(신제품개발론 II)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타당성을 거치면서 자신의 가상 프로토타입을 실제 버전으로 바꾸고 사업계획을 개발한다. 세 코스를 다 마친 학생들에게는 투자자에게 발표하고 마케팅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종업원을 관리하고 회사를 리드하는 경험을 하며,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회사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 보며 사업계획, 투자자 발표를 거치고, 학교내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의 멘토 경험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실습을 통한 ‘몰입형 창업교육(Immers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을 받음으로서 대학졸업 후 창업을 준비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III. 혁신 대학

혁신 대학(innovation university)은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대학-산업계 간 파트너십 구축, 기업가적 창업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신대학의 주요 기능은 ‘기초 및 응용연구를 통한 지식 개발’과 ‘교육을 통한 지식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2년 첫 번째 출간이후 2014년 ‘혁신 대학 2.0’ 이란 이름으로 출간된 이 책에서는 혁신을 창출하는 미국 대학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가를 살피고 있으며, 여기에 선정된 12개 혁신대학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Tomatzky and Rideout, 2014). 사례분석에서는 5가지 문제나 기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대학의 문화, 대학의 리더십, 기업가정신, 산학협력, 그리고 기술이전 등으로 구성된다(이원철, 최종인, 2017).

혁신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카네기멜론대학의 Richard Florida 교수가 강조한 창의적 계층(the Creative Class)의 3T 요소인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그리고 관용(Tolerance)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혁신 및 기업가적 대학 사례의 시사점

3T	기술	인재	관용
대학	대학기술 발굴과 활용	창의적 인재(교수, 학생) 육성	대학 혁신문화 조성
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학 중심의 기술개발</li> <li>- 관련 기술전문가의 멘토링 시스템 운영</li> <li>-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활동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지니어의 혁신 역량 및 리더십 촉진</li> <li>- 실전 중심 훈련을 통해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부하를 낮춤으로써 연구생산성 증대</li> <li>- 온라인 개방형 교육시스템 구축</li> </ul>
NC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창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제공</li> <li>- 연구 성과를 공공혜택 제품 및 서비스로 변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창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제공</li> <li>- 연구 성과를 공공혜택 제품 및 서비스로 변환</li> <li>- TEC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학생기업가정신 교육 제공</li> <li>-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 촉진</li> <li>-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혁신교육 및 연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혜택,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혁신적 교육 및 연구 수행</li> <li>- 지역기업과 연계한 대학 창업생태계 조성</li> </ul>
스탠포드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 관행과 합리적인 정책 수준</li> <li>- 대학 기술이전 가이드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식적 유비쿼터스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li> <li>- 체험 중심의 과정 제공</li> <li>- 교수를 중심으로 한 대학-지역 사회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수요를 반영한 산업제휴 프로그램 추진</li> <li>- 대학 최고경영자들의 리더십 및 기술혁신 역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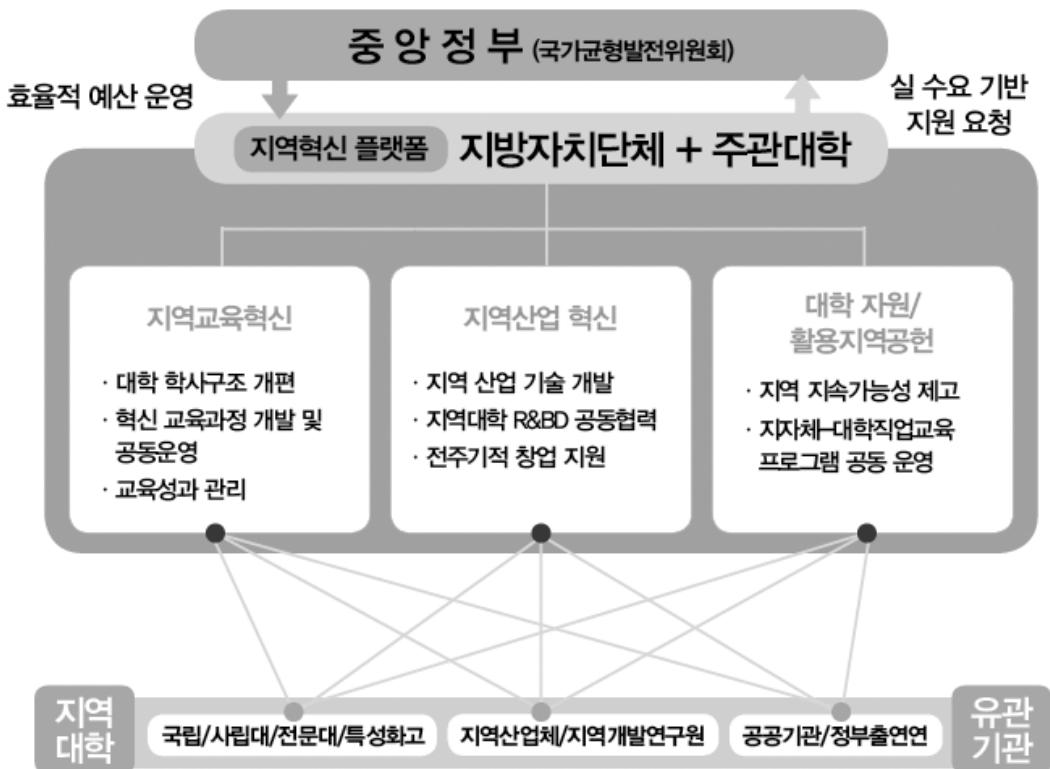
자료: 이원철, 최종인(2017)

1) Tornatzky, Louis G. & Elaine C. Rideout (2014), Innovation U 2.0 : Reinventing University Roles in a Knowledge Economy, Southern Growth Policies Board, SSTI에서 12개의 혁신대학을 선정하고 리더십, 경계연결역할 등에서 혁신대학 특성을 다루고 있다. 토나츠키는 앞서 1.0 에서도 혁신대학을 찾아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 대학교육혁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 2019). 여기서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혁신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지역의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연구개발결과를 지역산업과 연계해 사업화를 추진하며, 지역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USR)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통해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Bottom-up 방식이므로 지자체와 대학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심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자발적 준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편 2019년 7월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가 주최한 ‘기업인과 시장과의 대화’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용지, 인재, 자금의 확보의 3대 요인과,

〈표 3〉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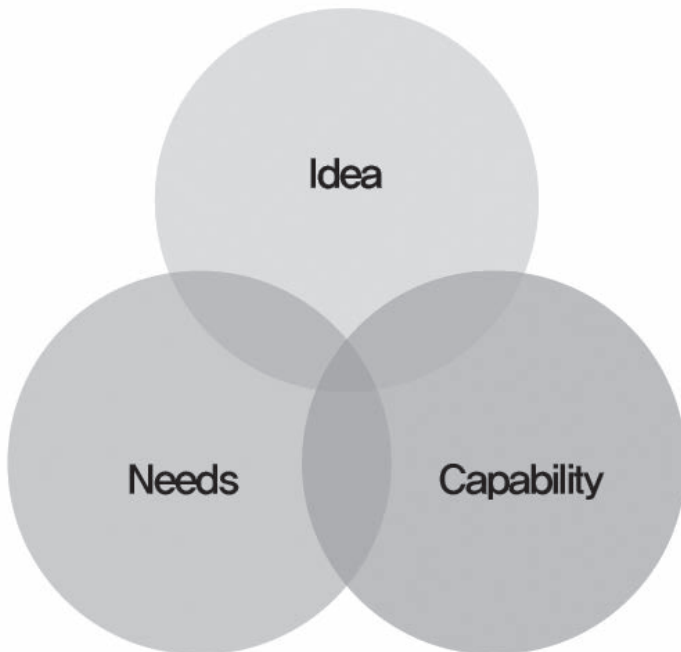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2019)

그밖에 기업유치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조석장, 2019). 특히 인재확보와 인재유치에 관련해서는 우수인재가 많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전은 가장 우수한 인재가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UST,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 등 여러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반해 대전에 머무는 인재들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며, 대전시는 코스닥 기업 등 기술기반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다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며, 그것도 좋은 일자리창출(decent job creation)에 정부와 지자체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야심차게 창업했지만, 몇 년 후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에 빠지곤 한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죽어가는 장소인 죽음의 계곡을 '기회의 계곡'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술이라는 씨앗과 아이디어만 놓고 보면 대전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그런데 '고객은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입한다'는 말처럼, 좋은 기술은 필수요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에 보다 시장 지향적 비즈니스 모델(BM)이 필요하다.

〈표 4〉 기회발굴의 3요인 : INC 기반의 문제해결학습 모델



자료 : 최종인(2016), 기술사업화: 죽음의 계곡을 건너다, 한경사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기업가정신으로 나타난 바, 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을 <표 4>의 '잉크(INC)' 모델로 찾아보자. 독특한 아이디어(I), 시민의 니즈(N), 그리고 실현을 위한 역량(C)을 의미하는 잉크(INC)이다. 첫째, 독특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는 실생활에서도 발굴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엑스포로 연결되는 1차선 도로에 우회전 차선을 추가하자 출근 시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또 등산을 위해 수통골 주차장에 갈 때 하천에 기둥을 세워 하천 쪽으로 인도를 2배 늘린 것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준 독특한 생활 아이디어였다. 둘째, 시민의 큰 불편함과 강한 욕구를 찾는 것이다. 앞의 두 사례에서 긴 신호대기로 출근 시 겪는 불편과 등산할 때 마다 찾길을 걷는 위험이 매우 컸다. 셋째, 아이디어를 구현할 기술, 특허, 노하우, 자금 등의 다양한 역량이다. 위 두 가지 아이디어가 실현되는데 최소 20년 이상 걸린 것은 아이디어 발굴이 부족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역량으로는 하천에 기둥을 세우는 기술, 예산지원과 추진력 등이 있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선포하며 상당 규모의 투자조합을 조성중인데 이것도 필요 역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역내 투자기관에게 기회를 주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투자역량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3,000개의 아이디어 중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1-2개일 뿐'이라는 주장처럼 아이디어는 구름같이 곧 사라진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많은 사람의 니즈와 강한 역량이라는 튼튼한 두 다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 매력적 사업모델(BM)을 만드는 창의성도 필요하다.

창업 기회 불꽃은 잉크(INC), 즉 '아이디어, 니즈, 역량'의 세 가지 원의 접점에서 일어난다. 이에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 등 3자의 리더십(L)이 INC에 추가되면 '가치창출'의 LINC가 된다. 교육부가 10년간 진행 중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명도 우연히도 LINC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의 창업선도대학 사업도 대전 내 대학들이 수행중이다. 한밭대, 충남대, 한남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건양대, 우송대 그리고 카이스트 등이 큰 틀에서 협력하는 '컨넥트 링크' 또는 '컨넥트 창업선도대학'을 대전시에 제안해 본다. 산업계, 대학, 지자체 등 3자가 산·학·관 협력체를 구성,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트리플 헬릭스)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창업가들이 척박한 땅이 아닌 비옥한 땅에 자신만의 독특한 씨앗을 심고 자라도록 '창업 옥토(沃土)'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역기반의 문제를 토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도출하고, 이를 검증할 고객과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내 기술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원방식은 공간, 자금, 멘토링 등 다양하며 대학과 대전시가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리빙랩 등이 연계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학은 '몰입형(immersive)' 창업교육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보유한 창업관련 자원을 종합하고, 이를 플랫폼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학은 보다 적극적으로 커리큘럼 개선에 노력하고, 비교과과정을 만드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창업관련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수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과의 연계성을 심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외 관계부처 합동(2013),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
- 교육부(2019),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8월 6일.
- 서진원, 최종인(2019),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s)에 대한 창업·경영학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14권, 3호.
- 이원철, 최종인(2017), 지역연계 대학창업교육 방향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12권, 6호.
- 조석장(2019), 기업인과 대전시장의 대화. 기업하기 좋은 대전 만들 '지혜 모으자', 파이낸셜뉴스, 7월 23일
- 최종인(2011),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대전의 정책방향, 대전발전포럼, 38호, 131-147.
- 최종인(2012), 숙련노동자 활용을 통한 대전의 역량강화, 대전평생교육포럼 2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최종인, 박차관(2013), 대학 창업교육 핵심 성공요인 : 미국 대학 사례의 시사점, 벤처창업연구, 8권 3호.
- 최종인(2014), 민선 6기 살맛 경제, 대전 건설, 대전발전포럼, 58-71.
- 최종인, 변영조(2015),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업가정신 제고 및 창업견인 방안, WSET Policy Report, 2015(5),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최종인(2016), 죽음의 계곡을 건너다 : 기술사업화, 한경사.
- 최종인(2019), 대전의 경제·산업 생태계분야, 대전시 출범 70주년 회고와 전망 : 아젠다 및 정책 과제 발굴. 대전세종연구원.
- 황혜란(2019), 대전시 출범 70주년 회고와 전망 : 아젠다 및 정책과제 발굴. 대전세종연구원.
- Tornatzky, Louis G. & Elaine C. Rideout (2014), Innovation U 2.0 : Reinventing University Roles in a Knowledge Economy, Southern Growth Policies Board.
- <https://ssti.org/report-archive/innovationu20.pdf>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 3장

#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

양봉석 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

#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

양봉 석 사회적경제연구원 이사

DAEJEON  
SEJONG  
FORUM

## I. 서론

### 1. 외생적 하향식 지역발전과 대전경제

대전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불균형 발전론<sup>1)</sup>에 의한 외생적 하향식 지역발전의 결과 외부 대자본에 의해 부의 역외유출과 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기여도는 터무니없이 낮다. 국내 대기업 지역지배와 탈지역화의 원인은 대기업의 '부재소유'와 지역의 '지점경제(본사경제에 대비되는 개념)화'에 있다.<sup>2)</sup>

2014년 순역외소비 규모는 7조원으로 전년 5조3000억원에 비해 무려 32%나 증가하여 2010년 이래 매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전국 상위권이다. 대전의 역외소비율은 47%, 충남은 50.3%인데 세종시민이 2014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65.9%가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었다.<sup>3)</sup> 대전지역 백화점 4곳과 대형마트 14곳의 경우 2015년 지역상품 평균 구매액은 매출액의 4.7%에 불과한데 백화점이 3.8%, 대형마트가 5.5%였다. 보안·경비·주차·청소 및 기타 용역의 경우 총 발주액 428억원의 33.9%인 145억만을 발주해 60%이상이 외지업체로 결정되었다. 기타 용역의 경우 본사에서 전국매장을 대상으로 총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탓에 지역업체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 2. 내발적 상향식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발적 발전의 경로를 밟고 있는 사회적경제 선진사례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그리고 캐나다 퀘벡 3개 지역은 유럽에서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가 아니면서도 거의 최상의 경제적 성과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단지 개인이나 가구별 소득수준만이 아니라 계층 간, 직업 간, 한 기업 내에서의 직위 고하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모두 크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 교육, 문화·여가, 삶의 만족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면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956년 다섯 명의 노동자로부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111개의 협동조합과 120개의 자회사 등 총 255개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액 150억 유로(약 21조 1600억 원)를 기록하며 스페인에서 매출 7위의 대기업이 되었다. 2009년 말 기준 8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에밀리아로마냐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기업 수 40만개로 대기업이나 수직통합기업 없이 수많은 중소기업이 내수와 수출을 담당한다. 협동조합 15,000개는 일반기업과 함께 소비자협동조합, 농협, 건설 등 삶의 전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삶 자체가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 지역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로 이탈리아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했다.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3,000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880만 명을 넘는다.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7만8000개에 이르며, 연간 매출은 180억 달러(약 19조 8000억 원), 자산은 1000억 달러(약 110조 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퀘벡주 전체 경제의 8~10%를 차지한다.

1)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외부 대자본을 투입하여 특정도시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 발전의 결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론. 한국은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에 집중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SOC와 공단을 건설하여 개발함

2) 정선기 외 (2012), 대전사회론, 대전발전연구원

3)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6

4) 대전유동업체상생발전협의회, 2016

### 3. 대전시 사회적경제의 한계와 혁신성장 필요성

#### 1) 제도에 기대어 발전한 사회적경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탑다운방식으로 자활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마을기업 지원제도 등 정부의 인건비 보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위주, 설립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 위주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 동시에 발전해왔기에, 독자적인 발전경로와 방법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다.

#### 2) 2016년 대전시 사회적경제 경영실태 조사 결과<sup>5)</sup>

대전시 50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은 설립목적에 일자리제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실업의 취약계층이 고용의 50%에 가깝다. 매출은 1억원 미만인 기업이 45%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며, 더 심각한 것은 67%의 기업이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경쟁력 평가와 정부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필요도에서 인건비 지원 다음으로 사업개발비나 마케팅, 판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업종 전문기술 노하우와 경영컨설팅 지원의 순이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 3)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혁신과 scale-up<sup>6)</sup>

사회적경제 기업은 기업으로서 조건과 역량구비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사업화가 기본이다. 그러므로 고객의 필요와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장의 기업과 동일하게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사회적경제 기업도 지속적인 제품·서비스의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화와 기업성장(일정규모 이상의 지속적 성장과 시장점유)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부터 성장까지 소위 데쓰벨리라고 하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도록 지원할 수 있는 레버리지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5) 사회적경제연구원

6)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세계적 전도사이자, 베스트셀러인 '하버드 창업가 바이블'의 저자로 유명한 다니엘 아이젠버그(Daniel Isenberg) 박사는 "시장규모를 성장시키는데 있어 80%는 결국 상품의 판매에 따른 기업의 성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언급하며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보다는 성장(scale)을 중심으로 한 시장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라고 주장한다.

#### 4)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현재 대전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개별기업지원 중심이고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단지 과학기술연구 기관 등 혁신성장에 필요한 자원들도 산재해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자신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혁신과 scale-up에 필요한 자원들을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 II. 본론

### 1.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이론과 전략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에는 주류경제학과 경영학의 이론 및 방법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목적과 조직원리 및 운영방법이 상이한 사회적경제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에 맞는 논리적, 실천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류경제학과 경영학의 이론과 방법들을 적용하더라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정체성에 맞는 이론과 방법이 함께여야 한다.

#### 1) 사회적경제의 소셜미션,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부조조직(mutual societies), 재단(foundations) 등의 결사체(associations)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혁신적 방법의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연대)경제방식으로서 ①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목표, ② 독립적 운영, ③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④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배분을 그 원리로 한다.<sup>7)</sup>

## 2) 지역발전의 패러다임과 신내생적 발전전략

내생적 발전이란 지역 내부에 있는 자원, 지역 내에서 삶의 모든 측면의 통합과 산업의 연관을 통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통제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외부대자본 단절은 불가능하므로 외부연계와 자생적 발전을 병행하는 신내생적 발전이 현실적이다. 지역경제측면에서 신내생적 발전의 전략은 지역 외부의 대기업 본사에서 직접 진출 하거나 하청에 의한 기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의 연관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3)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 VS 사회·기술체제 시스템 전환론

### ①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지식기반경제로 이전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발전지역과 저발전 지역을 가르는 기준은 지역혁신체제<sup>8)</sup>와 산업클러스터<sup>9)</sup> 조성능력이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혁신주체(기업, 지방정부, 업계, 연구소 및 대학 등)의 상호협력체제와 상호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학습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는 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제(대학,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체제(마케팅, 기술지원기관(TP, 기술지원센터, 기술이전기관 등)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기관(공공 및 비영리지원기관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지역 금융체제, 교육 훈련시스템, 정보통신 하부구조, 물류 유통체제, 지역문화 등의 지역혁신 인프라는 산업클러스터의 발전단계에 맞게 정비 확충됨으로써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및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정비는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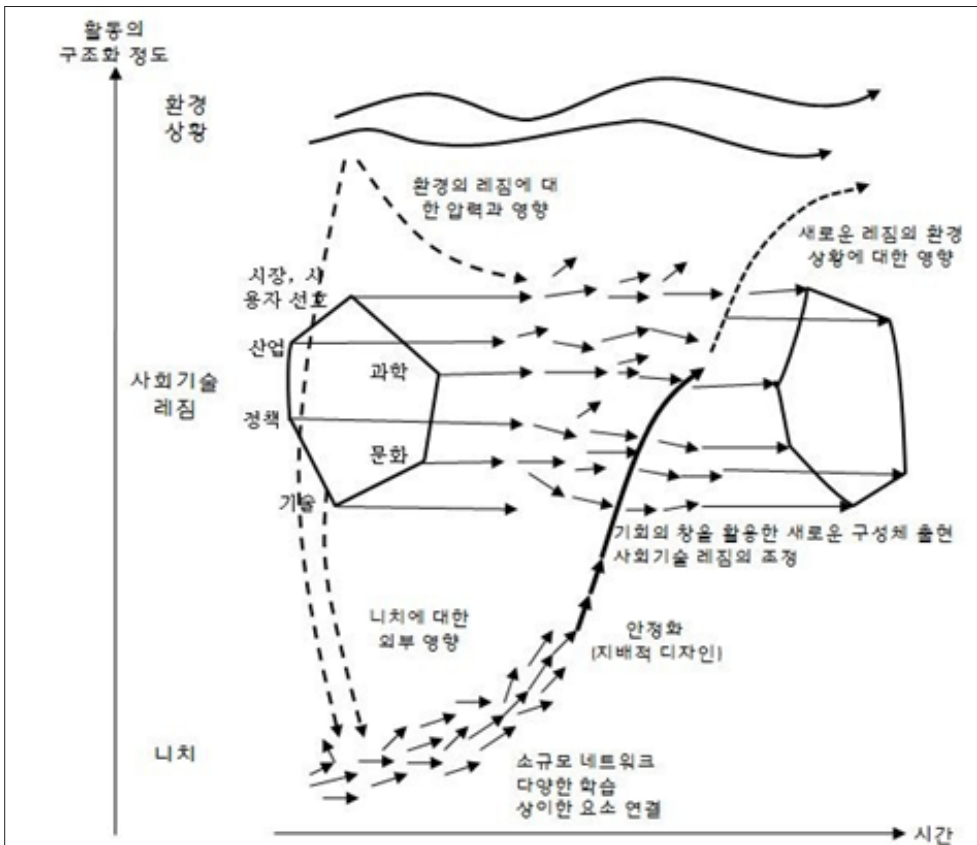
### ② 사회혁신과 시스템 전환론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론은 지식과 기술의 확산에 국한되어 있고 자본의 논리와 국내외 분업체제 편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내생적 발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전문가 중심, 실험실 중심 연구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먹거리, 주거, 에너지 등 하위의 사회·기술체제를 전환하는 시스템 전환과 리빙랩의 이론 및 방법이 등장하였다.

---

7) 장원봉과 드푸르니(Defourny, 2004) 등의 정의를 조합하고 보완함. 그러므로 사회적경제는 자본의 이해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지와 자원에 의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소셜미션이 핵심이다.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이종운동차원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공진화해온 사회적경제는 필연적으로 중앙집중화되고 불균등을 초래하는 국가와 대자본에 맞서 지방자치와 분권, 자주적인 경제, 평등한 사회, 자립적인 문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기술체제를 전환하는 시스템 전환론은 국가와 시장중심의 주류 사회·기술체제가 예를 들어 기후변화 등 거시적 압력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처럼 니치에서의 실험들이 나타나다가 차츰 주류사회·기술체제를 대체하고 전환하게 된다는 이론이자 방법론이다. 전통적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와 요구에 단순 대응하여 주로 기업의 상품형태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산업적 접근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는 과학기술은 물론 기존의 법률과 제도, 공공의 정책, 공공과 기업 및 사회 조직의 관행, 문화, 시민의식 등 해당 분야 의제 사회·기술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기술레짐의 조정으로 이해된다.



〈그림 1〉 사회·기술체제의 전환과정

3) 리빙랩

시스템 전환론은 기존 혁신이론과는 달리 수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용자의 행동(practice) 변화를 중요시하여 생활실험실이라 불리는 리빙랩을 적용한다. 음·식료품, 주거, 보건·의료, 이동,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나 시민사회의 행동 변화가 없으면 재생에너지 기술, 로컬푸드, 에너지절약형 주거공간과 같은 지속가능한 기술이 공급되어도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Shove and Walker, 2007).

4) 내생적 지역발전의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성공요인, 네트워크와 지원체제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 캐나다 퀘백 등 사회적경제 선진사례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 전략과 맞춤형 지원체제라고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략<sup>10)</sup>

시장 기업들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처럼 네트워크는 협동조합 등 규모가 작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본동원이나 대출의 어려움 등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표 1〉 사회적경제 선진지역 협동조합 네트워크 형태 분석

유형	연계방식		
	중앙집중형(강한 연계) 몬드라곤	분권형(약한 연계) 에밀리아 로마나주	거버넌스형 퀘백주
수평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조합간 자원, 서비스 공유</li> <li>- 단위별 전문화와 기술동맹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하청계약의 공동입찰 및 일거리 분담 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들의 지역개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별 협동조합 계통조직화</li> </ul>
수직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부문별 분사와 연계</li> <li>- 생산, 유통, 서비스의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생산시스템 속에서 고도의 전문화와 내부거래시스템의 결합</li> <li>- 지역 재화와 서비스의 혁신적인 상호구매 (매장 상품의 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QCM, 상티에, 지역개발협동조합에 의한 조직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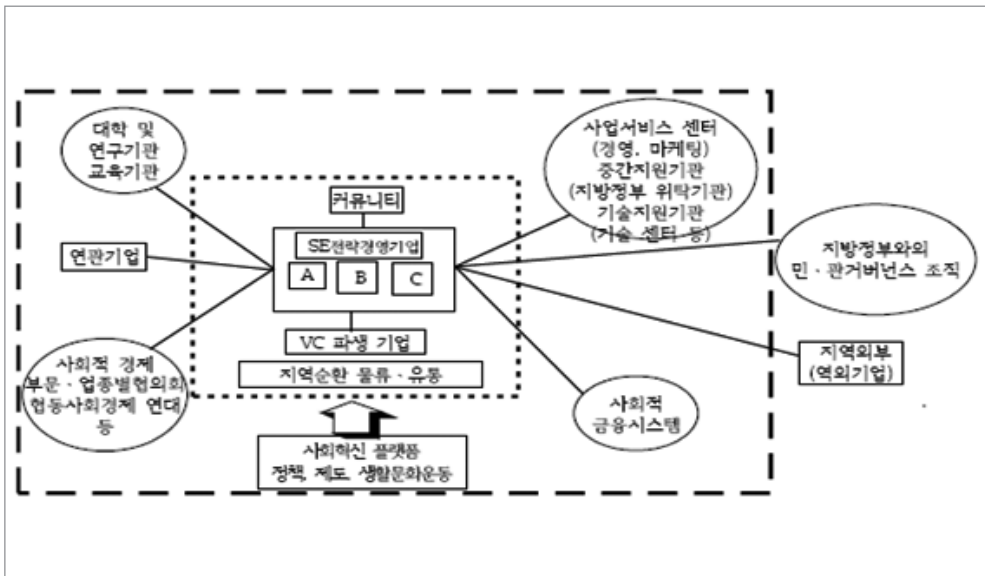


유형	연계방식		
	중앙집중형(강한 연계)	분권형(약한 연계)	거버넌스형
	몬드라곤	에밀리아 로마나주	퀘백주
금융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인민금고의 예금대출활동과 단위조합 회계의 중앙화 통제</li> <li>- 위험시 실질적인 금융연대 발휘 (기업간 대부 및 상호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년협동조합개발기금 (Coop Fond)의 창설 및 제도화</li> <li>* 모든 조합 잉여의 3%를 기금화</li> <li>* 청산시 잔여자산 기금으로</li> <li>* 신규조합 설립 및 투자에 사용</li> <li>- 상호대부를 보증하는 모임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연대기금,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연대</li> <li>- 대질맹협동조합지역 개발자본 CRDC</li> <li>- 상티에서사회투자 네트워크 RESQ</li> </ul>
고용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조합이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적정거리 내 다른 조합들은 실직 노동자들 일부 수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위기시 배분과 나눔을 통한 일자리 살리기의 공동노력</li> <li>- 해산시 타조합 실직자채용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조건과 연계된 노동연대기금의 대출조건</li> </ul>
2차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몬드라곤 총괄기구의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연합체 (레가코프 등)의 조직화와 서비스 지원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연합회 CQCM</li> <li>- 민관협치 상티에</li> </ul>

- 8) 유럽에서는 지역의 혁신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선을 통한 학습지역 형성이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
- 9) 산업클러스터란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 산업에 속한 유관 기관간의 연계로 이루어진 일군의 조직체, 또는 특정분야에서 경쟁 및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전문 공급업체, 용역업체, 관련 산업의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연합체 등 기관들의 결합체를 의미(경기개발연구원, 2002, 12)한다.
- 10) 네트워크는 경제학이 추론하는 협동조합 고유의 약점을 대부분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Menzani와 Zamagni(2009)는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다섯 가지로 지역전체의 특성은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와 네트워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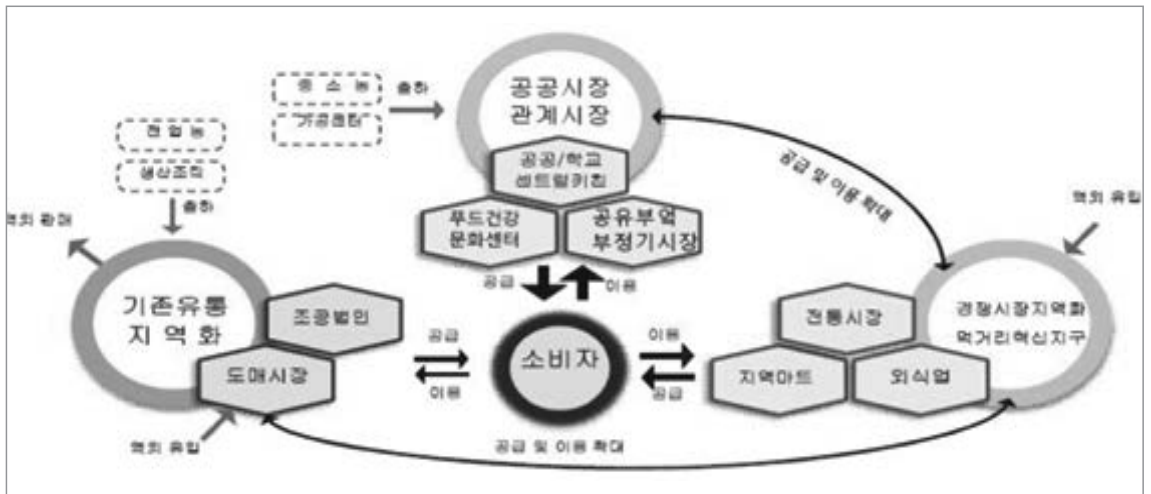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협동(Inter-cooperation)차원에서 ‘교육, 재정, 기술개발, 복지’의 네 기둥을 통해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는 레가코프(협동조합 전국연합회)와 중소기업연합회인 CNA가 회계와 금융, 법률과 정부 로비 등 일반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진흥공사 에르베르트(ERVET)는 각 지역마다 실질서비스센터를 세워 각각 전문화된 산업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 퀘벡은 도시의 CEDCs와 농촌지역의 CDR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 금융은 주정부와 금융협동조합 데자르맹은행 및 퀘벡 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 대학과 연구소들은 협동조합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단기 컨설팅과 장기계획 수립에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과 훈련 조직은 노동경제사회경제공동체위원회(CSMO/ESAC), 상티에,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 지원체계가 작동하면서 전략경영형(technology leader)기업이 선도하여 전·후방가치사슬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sup>12)</sup>



〈그림 2〉 사회적경제 선진지역의 지원체계와 전략경영형 기업 중심 네트워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의 대안 소셜마케팅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세 개의 시장이 있는데 공공시장, 관계시장, 경쟁시장이다. 공공시장은 법률과 정책 및 제도에 의한 보조금과 공공구매시장이고 관계시장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다. 경쟁시장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가 가능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막대한 자본과 마케팅이 동원되는 영리기업의 주류경제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마케팅 전략은 세 개의 시장 가운데 공공구매시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하고 관계시장을 통해서 입지를 굳혀야 하며 두 개의 시장에서 형성된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시장에서 대자본과 경쟁하여 주류 시장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와 조례 및 정책을 수립하고 중소농의 1차 농산물과 가공식품생산을 지원하였다. 동시에 완주와 전주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완주군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과 연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푸드시스템을 지역화 하였다,



〈그림 3〉 푸드플랜에 의한 공공시장, 관계시장, 경쟁시장 지역화 모형도

- 11) 사회적 경제 연구를 위한 지역대학연구기관 연합(ARUS-ES), 퀘백사회적경제연구기관 네트워크, 협동조합과 상호공제보험기업연구 및 교육기관(RECIS), 집단기업과 제연구기관 및 정보센터(CIRIEC), 기업가 정신 기금, 칼폴라니연구소 등이 있다.
- 12) 특히 현재는 기술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만, 신기술 정보를 파악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추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환경대응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전략경영형 중견·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2.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모델 제안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에밀리아볼로냐, 캐나다 퀘벡은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나 공공경제를 포괄하는 주류체제로 전환하였다. 신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푸드, 보건의료, 에너지, 주거, 돌봄, 금융, 교육 등 지역사회의 부문별 하위 사회·기술체제들을 기존의 시장 중심에서 사회적경제 중심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 1) 사회적경제 의제별 혁신플랫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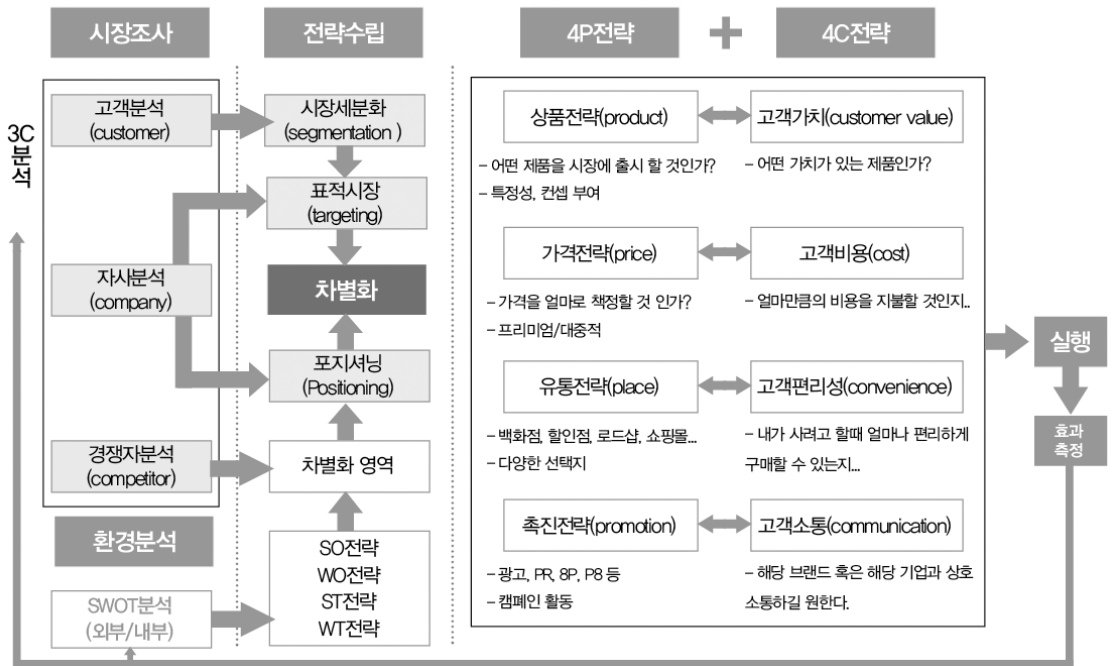
첫번째, 부문별 하위 의제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기업 등 실행단위가 연대수준에 따라 의제별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두번째, 실행단위는 정체성에 따라 다른 실행수단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해당 혁신의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유통한다, 마을공동체는 해당 혁신의제 제품·서비스 혁신을 위한 리빙랩에 참여하면서 관계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해당의제의 혁신필요성과 대안을 콘텐츠로 하여 지역사회 공론화를 조직하고 지방정부와 의제별 위원회 등 민·관거버넌스를 리딩할 수 있다. 세번째, 의제별 혁신에 필요한 연구, 교육, 사업지원, 사회적 금융 등 지원인프라와 민·관거버넌스에 의해 조례, 제도, 예산 등 정책자원이 필요하다.

### 2) 사회적경제 의제별 사회·기술체제 전환 실행 유형결정

사회적경제 의제별 사회·기술체제 전환 실행은 지역의 역량과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제별 혁신플랫폼 선도형은 지역의 특정 혁신의제 이해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연대수준에 적합한 포럼이나 협의회 등의 조직을 형성한다. 특정의제 혁신플랫폼에서는 해당의제 혁신 전략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단위와 지원인프라 조직 및 민·관거버넌스에 의한 정책자원을 생성하며 공공시장과 관계시장을 조직한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전략경영형 기업 선도형은 산업클러스터에서 특정 분야 전략경영형 기업이 해당분야 전후방가치사슬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과 성장 및 혁신플랫폼까지 조직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업종별 사회적경제 기업 네트워크 선도형은 사회적경제 전략경영형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고 영세한 소규모 사회적경제 기업을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혁신의제에 해당하는 업종별로 분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집합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유형이며 보편적 추진이 가능하다.

3) 업종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선도형 사회적기업 혁신성장 모델 사업 추진

업종별 사회적경제 기업 네트워크 선도형을 표준유형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과 scale up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장정도에 맞추어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의제별 혁신 플랫폼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다. 첫 번째, 대전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조직과 지역사회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와 대덕연구단지 주요주체들이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가칭)대전시사회적경제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기업을 건강, 교육, 미디어, 에너지 등 업종별로 분류한다. 세 번째, 업종별 네트워크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제품·서비스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공통의 문제인식을 객관화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네 번째, 도출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시장의 주류기업들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서비스들의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향후 표준화, 고도화 개발의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한다.



〈그림 4〉 제품·서비스 포지셔닝 절차<sup>3)</sup>

다섯 번째, 비즈니스모델 캔버스(The Business Model Canvas)를 작성하는데 영리기업의 것과 차별화된다. 고객세그먼트는 의제, 업종별 주민의 문제와 요구 및 필요주민이고 가치제안도 시장과 국가중심 주류사회·기술체제를 전환하므로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공공시장, 관계시장, 경쟁시

13) 2019. 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진흥기술원,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운영 매뉴얼

장별로 가치제안이 다르고 마케팅도 각각의 시장 특성에 맞게 조직되어야 한다. 재정구조도 공공시장의 보조금이나 공공구매예산, 관계시장의 주민구매수입, 그리고 경쟁시장 지역화에 따른 B2B매출로 구성된다. 여섯 번째, 제품·서비스 포지셔닝 절차에 따라 파악된 전략 환경에 따라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등 네트워크의 전략적 통합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일곱 번째, 업종별 네트워크의 통합전략범위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개발한다.<sup>14)</sup> 제품·서비스 개발은 원초적이거나 기존시장에 진출하는 신제품, 기존 제품·서비스에 추가하거나 개선 등이다. 여덟 번째, 업종별 네트워크 공동사업화 추진인데 공동사업체 구성,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소셜마케팅 추진이다.

#### 4)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거버넌스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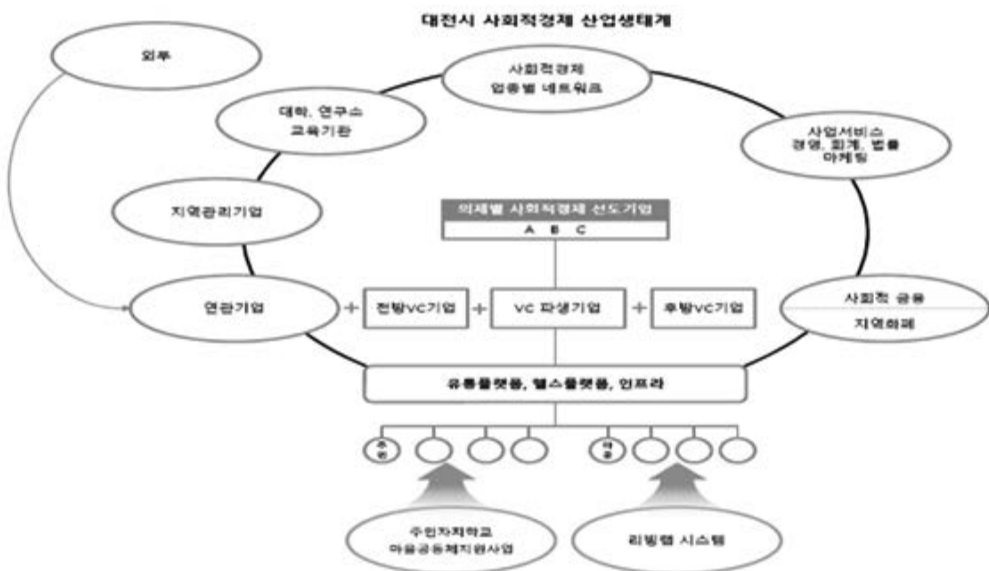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외부대자본 종속 하위의 사회·기술체제를 사회적경제 주류의 사회·기술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각의 의제별 혁신플랫폼 전환과정은 지역사회 관련주체의 결집과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의 사회·기술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따르는 지방정부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중심 시스템 전환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민·민과 민·관거버넌스, 민·관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제도를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혁신 거버넌스와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5〉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 거버넌스와 실행체계 개념도

### Ⅲ. 결론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국민국가단위의 발전계획은 점차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역불균형발전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중심으로 신내생적 발전전략을 취한 선진지역 사례의 물질적, 비물질적 성취는 강력한 시사점이며 대안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중앙정부 제도와 정책에 의해 하향식으로 양적 성장에 치우쳐 와서 혁신성장이 절실하다. 지역발전의 이론인 지역혁신체제와 산업클러스터, 사회·기술체제 전환의 사회혁신이론 및 사회적경제 선진지역의 네트워크 전략과 지원체계의 조합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시장경제 중심 하위의 사회·기술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의제별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은 업종별 네트워크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적경제 (의제)업종별 네트워크에서 제품·서비스 포지셔닝 절차를 거치면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전 과정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지역소재 대학교와 연구단지 등 혁신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해야 한다. 한편 경영전략 측면에서 환경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 전략경영형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품·서비스 개발과정의 리빙랩과 완성 이후의 관계시장 형성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연계된다. (의제)업종별 리빙랩에 참여한 마을공동체의 문제와 요구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구청과 시청에 의제별 정책으로 제안된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통한 대전시 사회·기술체제 전환의 신내생적 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시스템 전환 의제 혁신플랫폼과 연관된 사회적경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6〉 의제혁신플랫폼과 연관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개념도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5),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해외연구 결과보고서
- 김광선(2014),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정책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전시(2015), 대전시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조사
- 박경(2012), 대전사회론, 대전발전연구원
- 박경(2012), 우리나라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학술대회 2012
- 사회적경제연구원(2017), 2016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경영실태조사 보고서
- 송위진(2009),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통합, 한국혁신학회 제4권
- 송위진·성지은·김종선·장영배·정서화·박안용(2015),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진흥기술원,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9),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운영 매뉴얼
- 윤윤규·이재호(2004), 지역산업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윤찬영(2018), 리빙랩(Living Lab)이란 무엇인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인우(2015), 퀘백 지역개발협동조합 시사점.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설 사회적 경제연구센터
- 정태인외(2015)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6), '대전·세종·충남지역 역내외 소비현황 및 시사점'
- 최재섭(2017), 재벌대기업의 수직-수평통합과 도소매 유통시장 과점지배 구조 서울시
- Halary, Isabelle(2005), 몬드라곤과 에밀리아 로마냐 협동조합 네트워크 현황
- Menzani와 Zamagni(2009),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형태
- The Science Times(2016. 11. 14)'GEW KOREA 2016' 세미나 취재기사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 4장

# 대전 · 세종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김진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 대전·세종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김진 | 전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DAEJEON  
SEJONG  
FORUM

## I. 글을 들어가면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외교갈등 등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부동산시장 역시 전국적으로 하락기 초입에 진입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 시장분위기에 반하여 대전·세종의 2019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대세하락의 징후를 아직 발견하기 어려우나, 위 위험요인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반기에 유럽 및 세계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거시경제의 경색 및 이로 인한 자산시장 충격이 대전·세종에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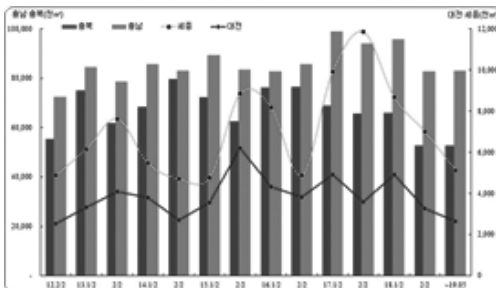
본 투고는 1)2019년 상반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전·세종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2)단기 및 중기적으로 두 도시의 부동산시장을 위협할 위험요인을 파악하며, 3)향후 두 도시의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정책방향을 제언함에 그 목적을 가진다. 시장현황은 토지 및 주택시장을 분리하여 고찰하게 되고, 시장위험요인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결과에서 제시하는 5개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되 지자체가 관리가능한 가계부채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방향은 부동산정책과 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과 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의 구성을 부동산산업의 진작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하게 된다.

## II. 대전·세종 부동산시장의 2019년 상반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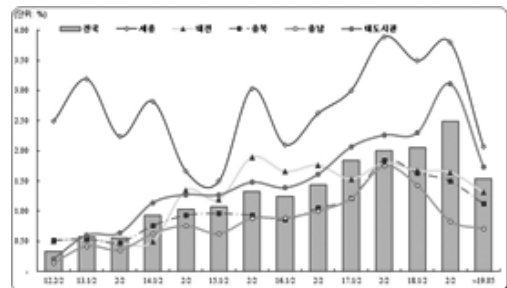
### 1. 토지시장 관련 주요 지표

2019년 5월까지 대전의 순수토지거래면적은 2,662천㎡로 집계되는 바, 2018년 하반기의 3,280천㎡ 및 2018년 상반기의 4,916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순수토지거래면적은 5,128천㎡로 계수되는데, 이는 2017년 하반기 11,863천㎡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이상 그림 1 참조). 업계의 관행처럼 토지거래량을 장래 분양물량의 선행지표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2020년 이후 대전시와 세종시의 신규분양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일부 가능하게 한다.

상술한 추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지가변동률조사에서도 발견된다(그림 2 참조). 2019년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은 1.54%로 분석되는데, 이는 2015년 상반기 1.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상반기 2.05% 및 하반기 2.49%의 높은 상승률과 대비되어, 전국적으로 토지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부권 역시 상승률의 하락추세가 발견되는데, 대전시가 1.64%(2018년 하반기)에서 1.32%(2019년 상반기)로, 세종시가 3.79%에서 1.74%로, 충청남도가 0.83%에서 0.71%로 그리고 충청북도가 1.50%에서 1.12%로 낮아진 상태이다. 다만, 중부권의 상승률 하락추이는 전국 대도시권의 그것보다는 충격이 덜한 편인데, 후자는 3.11%에서 1.74%로 크게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중부권 순수토지거래량(2019 상반기)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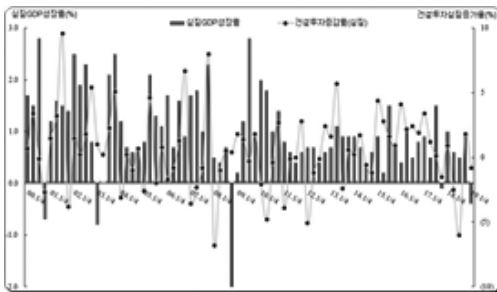


〈그림 2〉 중부권 반기별 지가변동률 변화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토지거래량과 가격상승률에서 도출가능한 시사점은 토지수요가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2020년 이후 분양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추론하게 만든다. 만약 현재 거론되는 여러 거시경제의 위험이 2019년 하반기에 현실화된다면, 하반기의 토지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은 보다 나쁜 지표를 보이게 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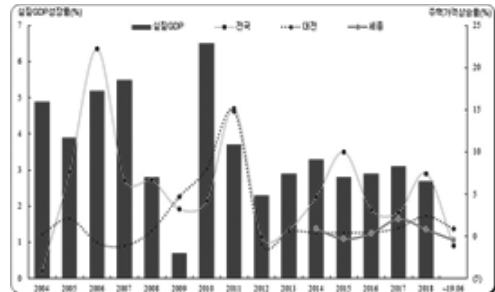
## 2. 주택시장 관련 주요 지표

2019년 1사분기 실질GDP의 증가율은-0.4%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4사분기의 -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수출물량의 감소, 내수 부진 등 여러 경제요인 외에도, 건설투자의 실질증가율이 -0.8%로 감소한 것 역시 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참조). (1986년에서 2018년까지) 실질 GDP상승률과 (KB 매매종합지수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0.36, 수도권 및 대전지역은 0.38의 선형상관계수를 보인다.



〈그림 3〉 분기별 GDP성장률과 건설투자증감률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거시경제분석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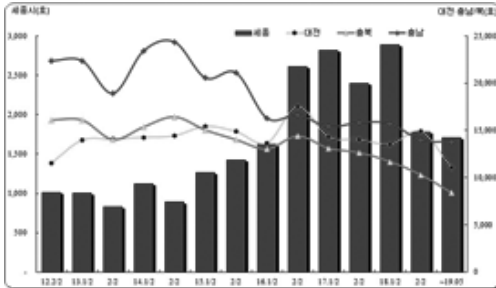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GDP성장률과 주택가격상승률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월간 KB 주택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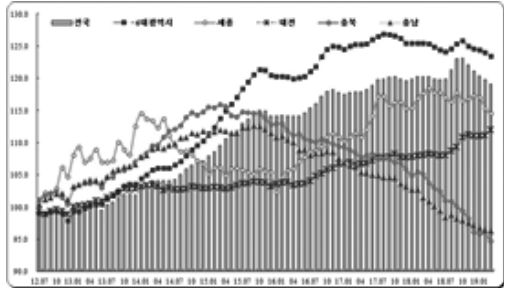
2019년 상반기의 경기후퇴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부의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지 만(1.07% 하락), 대전(0.91% 상승)과 세종(0.44% 하락)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없었거나 제한적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즉 2019년 상반기에 아직 대전·세종에까지 경기후퇴로 인 한 부동산시장의 위축이 심각하였다고 분석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2019년 5월까지 대전시의 주택거래량은 각각 8,137호와 1,503호로 계수되는데, 이 는 전년 하반기 11,500호 및 1,581호에 대비하여 각각 29.2% 및 4.9% 감소한 수준이다. 대전시의 거래량은 2016년 하반기에 정점(13,740호)을 나타내며, 세종시는 2018년 상반기에 최대물량 (2,615호)을 보이고 있다(이상 그림 5 참조). 두 도시는 2019년 상반기의 거래량 변동추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2월(1,386호)을 저점으로 3월(1,508호), 4월(1,735호) 및 5월(1,989호)에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1월(492호)를 정점으로 2월(291호), 3월(263호), 4월 (214호) 및 5월(243호)로 갈수록 거래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5〉 중부권 주택거래량 변화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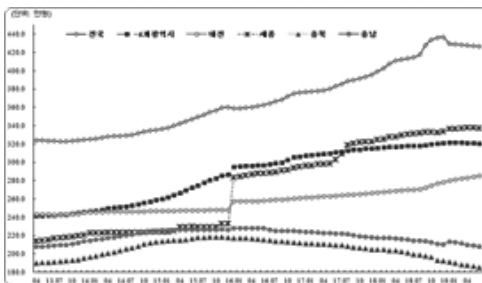
〈그림 6〉 중부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의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이런 거래추이는 그림 6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2년 7월을 100으로 설정하고 가격지수를 추적하면, 전국(123.1), 수도권(134.1) 및 6대 광역시(125.9) 모두 2018년 10월에 정점을 형성하고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12월에 117.3으로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반면, 대전시는 계속 상승하여 2019년 3월에 112.0을 기록하고 있다. 적어도 통계 상으로는 현재 대전시만 주택시장의 확장기를 구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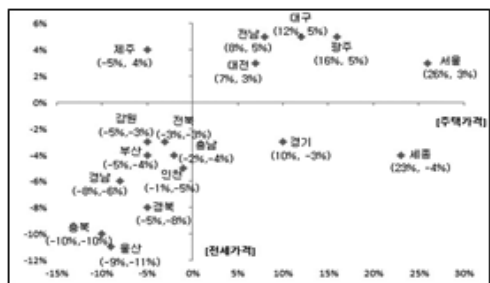
활발한 거래와 실거래가격의 급등은 결과적으로 최근 대전·세종의 높은 아파트가격으로 나타난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대전시와 세종시의  $m^2$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285.5만원과 337.4만원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2018년 말에 대비하여 각각 2.53% 및 1.22%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점의 전국(426.8만원), 6개 광역시(320.5만원) 및 수도권(579.9만원)의 평균치들과 비교하여, 두 도시의 절대가격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이상 그림 7 참조).

그림 8은 부동산114의 실거래가지수에 기초하여 2017년 6월말 대비 2019년 3월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전세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를 분류한 것이다. 대전시는 두 지표 모두 상승하는 1사분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같은 1사분면에 있는 대구·광주와 함께 ‘대대광’이라는 신조어를 낳고 있다. 세종시는 대규모 입주물량으로 인하여 전세가격 상승률은 약세인 반면, 투자심리로 인하여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4사분면에 소재하고 있다.



〈그림 7〉  $m^2$ 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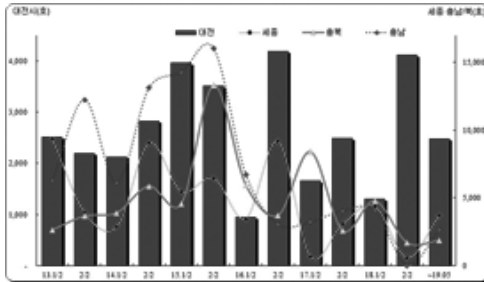
자료: KB국민은행, KB부동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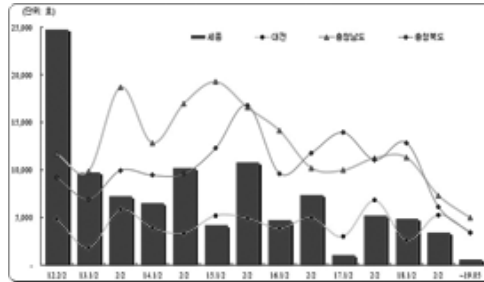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주택가격·전세가격의 변동률

자료: 키움증권, 2019.03.15: P4

2019년 5월까지 분양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공급물량은 그림 9에서 보듯이, 대전시가 2,486세대 그리고 세종시가 3,721세대로 계수된다. 대전시 분양승인실적은 2016년 하반기 4,199세대 및 2018년 하반기 4,121세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더러, 올해 분양이 계획된 10개 단지 12,119세대를 크게 밑돌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되거나 일부 물량은 내년으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는 2013년 하반기 9,362세대, 2014년 하반기 9,043세대, 2015년 하반기 6,470세대, 2016년 하반기 9,200세대 등 과년도 분양물량이 많았었고, 따라서 주변의 대전시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향후 세종시에 대규모 분양물량이 계획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2019년 분양계획물량 역시 8개 단지 4,563세대에 불과한 바, 향후 대전 주택시장을 일시에 냉각시키는 부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으리라 판단된다.



〈그림 9〉 중부권 공동주택 분양승인 변화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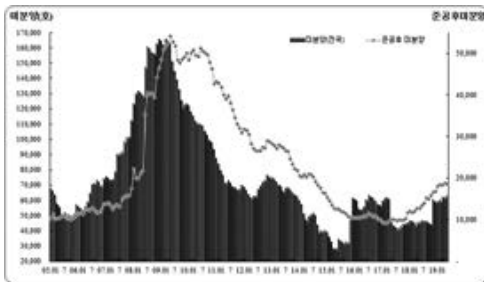
〈그림 10〉 중부권 주택착공물량의 변화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

- 1) 대전시에 2019년 분양이 계획된 물량은 일반아파트 4개 단지의 5,953세대, 재개발·재건축 6개 단지의 6,166세대 등 총 10개 단지의 12,119세대이다(대전시 내부자료 참조).
- 2) 2015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발간한 '행복중심복합도시백서'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인구의 35.9%는 대전에서, 22.2%는 충남·북에서 유입되고 있었고,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비율은 각각 32.6% 및 9.4%에 불과하였다.
- 3) 2019년 세종시 분양계획은 상반기 7개 단지의 4,123세대, 하반기 440세대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게시자료 참조). 상반기 계획물량 중 4-2생활권의 M5블록(499세대)과 L3블록(318세대)은 일정이 지연되어, 하반기(7월 16일)에 분양에 착수한다(한국경제신문, 2019.07.08. 기사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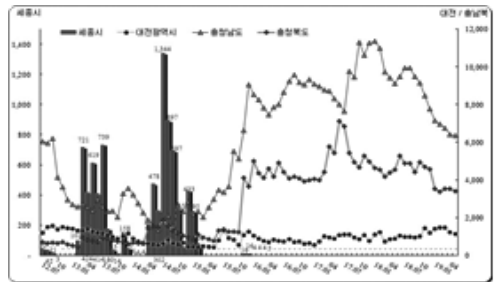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2019년 5월까지 착공신고를 한 주택사업은 각각 3,418세대와 627세대로 집계되고 있다(그림 10 참조). 전자는 2017년 하반기 6,823세대, 2018년 하반기 5,299세대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분양승인물량(2,486세대)을 웃돌고 있어서, 착공이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다. 후자는 2012년 하반기 24,774세대, 2014년 하반기 10,203세대, 2015년 하반기 10,779세대에 견주어 볼 때, 착공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근시일 내 세종시는 신규입주물량이 제한되므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세대수는 62,741세대를 기록하는 바, 이는 2013년 11월 (63,709세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준공 후 미분양도 18,558세대로 증가하는데, 이 또한 2014년 8월(19,136세대) 이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그림 11 참조).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일정 시차를 두고 준공 후 미분양이 미분양총량을 후행하였다면 최근에는 전체 미분양의 증감과 무관하게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2019년에는 미분양의 소재지가 수도권·지방권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그림 11〉 전국 미분양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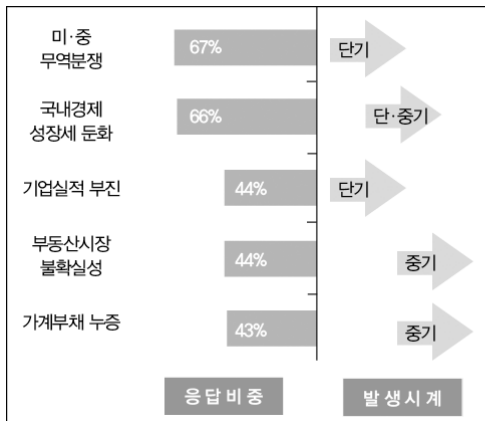
〈그림 12〉 중부권 미분양 주택물량 변화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다만 중부권 전체의 미분양 주택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향후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세종시는 2016년 4월 이후 미분양이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대전시 역시 1,000세대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2019년 5월 현재 1,137세대). 2018년 1월 11,352세대의 미분양세대수로 인해서,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충청남도는 2019년 5월에 6,355세대로 그 수치를 크게 낮춘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역시 한 때 7,108세대(2017년 6월)에 이르던 미분양이 현재 3,412세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지표 분석을 정리하면, 경기하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라는 전국적 현상과 달리, 적어도 아직 대전·세종에서는 시장 침체 징후를 찾기 어렵다. 특히 대전시는 주택거래량, 가격, 분양물량, 착공물량, 미분양세대수 모두에서 부동산경기(Real Estate Cycle) 상 확장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Ⅲ. 대전 · 세종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위협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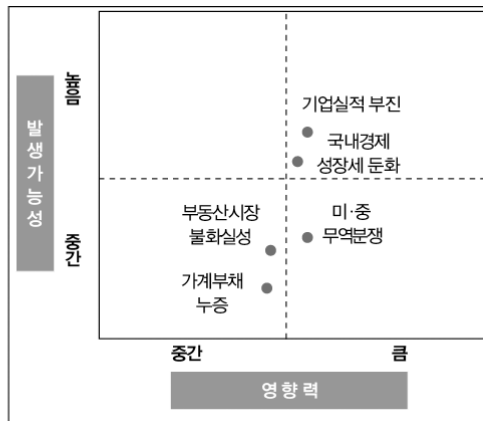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매 반기마다 발표하는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 ‘1년 이내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이 2018년 5월 조사에서는 9%, 동년 11월에는 29%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다시 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5월 조사에서 응답자 96명에게 중요도를 질의한 결과 응답빈도수 40% 이상인 위협요인은 5개인데, 이 중에서 ① 미·중 무역분쟁(67%)과 ②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66%)가 가장 주요한 위협요인(응답비중 50% 이상)으로 나타나며, ③ 수출 감소 등 기업실적 부진(44%), ④ 부동산시장 불확실성(44%), ⑤ 가계부채 누증(43%)에 대한 응답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중에서 ①과 ③은 단기(1년 이내)에, ②는 단·중기에 그리고 ④와 ⑤는 중기(1~3년)에 현실화 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으로 분류된다(이상 그림 13 참조). 그림 14에서 보듯이, ②와 ③은 발생가능성과 그 파급력이 높은 위험이고, ①은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그 영향력이 높은 위험이며, ④와 ⑤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지 않은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은행, 2019.05).



〈그림 13〉 리스크 요인별 발생 시계<sup>1)</sup>

주 : 1) 단기는 1년 이내, 중기는 1~3년

자료: 한국은행, 2019.05, 2019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P2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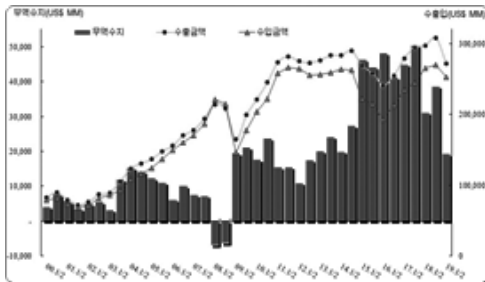


〈그림 14〉 리스크 요인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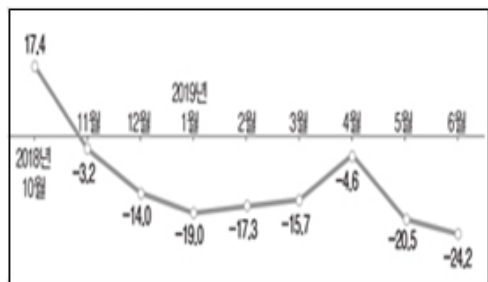
위 5개 위협요인 대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2019년 6월 29일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에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서, 파국을 일시적으로 봉합 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 뿐 아니라 국내 경제 역시 상당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상반기 수출 부진으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 국내경제 둔화는 상당 부분 현실화된 상황이다. 상반기 수출금액은 2,713억 달러이고 수입금액은 2,521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192억불에 그치

고 있다(그림 15 참조). 수출금액은 전반기 대비 12.0%,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금액이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역시 같은 기간 각각 50.2% 및 38.2% 감소한 수치이다. 반도체 분야가 475억 달러에 그쳐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것이 수출부진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런 부진한 수출이 1사분기 실질GDP의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과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역시 상당히 비관적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제조업이 부진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은 양상을 노출한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작년 11월부터 대중국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2%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5〉 수출입금액 및 무역수지 변화추이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그림 16〉 대중국 월별 수출증감률(전년 동기)  
 자료: 한국무역협회, 매일경제(2019.07.1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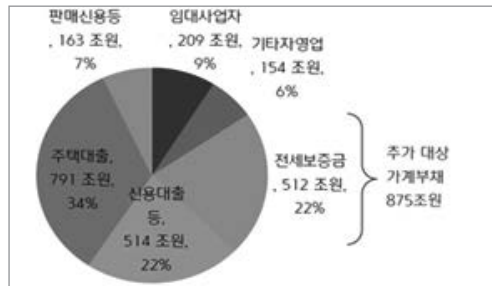
문제는 상술한 수출 감소, 경제 충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보다 불량해질 우려가 높다는 것에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상술한 미중 무역분쟁 이외에도 10월까지지는 노딜(No Deal) 상태에서서라도 브렉시트(Brexit)를 마무리 지으려는 영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뉴스는 세계경제의 바로미터(Barometer)로 불리는 싱가포르의 2사분기 GDP성장률이 0.1%에 불과하여 시장 예상치인 1.1%를 훨씬 하회할 뿐더러, 연률로 환산하면 전분기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다(뉴시스, 2019.07.12.). 한편 한국은 당면한 일본과의 분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주요 수입소재의 조달난관 정도로 문제가 그치지 않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강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S&P(Standard & Poors)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당초 2.5%에서 4월에 2.4%로 그리고 지난 7월 다시 2.0%로 낮추었다. 피치(Fitch)도 동 전망치를 2.0%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1%, 노무라증권은 1.8%로 역시 하향조정하 바 있다(연합인포맥스, 2019.07.10).

4)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3개 수출품목 규제만으로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 10%, GDP 0.4% 및 경상수지 흑자 100억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9.07.15.).

이렇게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증폭됨에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월에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전월의 72.9(실적지수는 75.2)에서 소폭 상승한 78.2를 기록하고 있다. 동 수치가 2014년 10월 157.6 그리고 2017년 6월 121.8을 기록하였던 사실을 상기하면, 현재 주택사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은 편이라는 판단이다. 대전·세종은 2018년부터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데, 7월 전망치가 각각 89.2 및 100.0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거시경제를 후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하반기 거시경제의 경착륙 또는 경제위기 도래 시에, 대전·세종만 하방위험에서 자유로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림 17〉 가계신용 잔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노컷뉴스(2018.11.25.) 재인용



〈그림 18〉 가계부채 2,343조원 구성(2018.03)  
 자료: 키움증권, 2018.10.24, 2018 가계부채보고서 III

상술한 거시경제 위험요인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이라 할 수 있으나, 가계대출과 임대사업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적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본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가계대출규모는 1,514.4조원인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의 신용평정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OECD기준을 따르지 않는 바, 자영업자대출 590.7조원과 전세보증금 512조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가계부채는 2,617조원에 달하게 되어 GDP의 150%, 가처분소득의 260%를 상회하는 위험수준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정부 부채 40%와 기업부채 100%를 합산하면, 한국의 부채규모는 GDP의 300%에 육박하는 규모이고, 자칫 ‘부채의 덩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5) 2018년 10월 금융감독원에서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비율을 보면, 2010년말에는 43.6%에 불과하였으나, 46.5%(2013년), 47.8%(2014년), 53.5%(2015년), 53.5%(2016년), 53.4%(2017년)로 매년 그 질이 악화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7.)
- 6) 비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의 그것보다 훨씬 질이 좋지 못한 바, LTV비율이 높고 DSR이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 7)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2018년부터 은행권이 도입한 IFRS 9이 있다.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기존의 부도율 중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변경하는데, 한계차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총당금 적립을 늘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키움증권, 2019.01.23.). 이는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조조정을 유발하는데, 특히 취약기업비중이 높은 임대업, 도소매·음식점업이 그 대상이 된다. 내수 침체로 인해서 전방산업인 자영업 업황은 악화일로인 반면 임대공간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실률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여기에 은행 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시장외곡현상이 초래되어 과도한 대출로 LTV의 상승, 차주 상환능력의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한편으로 주택과 상가 모두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신용위험이 높아진 바, 특히 상가 매매낙찰가율은 1사분기 55%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정부는 풍선효과의 차단을 위해서 은행 뿐 아니라 제2 금융권과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다(키움증권, 2019.05.10.).

가계부채가 너무 과중할 뿐더러 주택담보대출의 질(LTV비율)이 빠르게 악화되어, 금리가 2%만 상승하여도 주택담보대출의 적격차주가 30~40%가 감소하여 수요가 급감할 수 있으며, 현재차주의 연체 및 부실화가 급증하여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가계대출의 가장 약한 고리로서 자영업자대출 부실화 그리고 전세가격의 하락이 지목된다. IFRS 9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선제적인 대출 구조조정이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대상이 바로 자영업과 임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 대규모 입주물량은 전세가격 하락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부채 감축(Deleveraging)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채무 재조정과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하여 발생할 위험을 추론할 수 있다(키움증권, 2019.03.15.)

## IV. 대전 · 세종 부동산시장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대전시와 세종시가 부동산시장의 부침과 관계없이 향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① 부동산개발사업을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 ② 주택사업·산업정책·인프라 공급을 파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각; ③ 도시공간을 분절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 혁신클러스터를 구현하려는 통합적 노력; 그리고 ④ 불요불급한 사업비용 체증요인의 구제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관련하여 주택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영국의 부동산정책은 민간참여, 산업진작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민간 개발사업을 단순한 부동산 영리행위가 아니라 고용창출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즉 1990년대부터 지자체 소재 사업의 경우, 민간 개발이익의 환수 또는 용지개발이익의 공공 귀속이라는 사회주의 관점을 포기하고 ‘고용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성장엔진 확보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영국도 과거에는 광역권별로 설립된 지역개발공사(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주택 정책을 일임하였는데, 이는 민간개발과 단절될 뿐 아니라 산업정책과 괴리되는 문제를 낳았다. 최근에는 광역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합동 파트너십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가 주택정책과 산업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LEP는 지역경제개발과 고용창출에 필요한 기반시설·주택 건설을 지자체와 함께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의 개발을 진작하고 있다(en.wikipedia.com).

대전시 역시 노후화되었거나 신규 개발되는 양호한 입지에 성장거점을 선정하고, 이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진작하는 혁신클러스터를 민간과 함께 조성하는 시도를 구상할 수 있다. 혁신클러스터는 단순히 생산공간을 공간적으로 집적시키고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산업 간 융복합, 지식산업·S/W산업·R&D 및 디자인과의 결합, 비제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하여 새로운 혁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는 산업생태계의 배양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클러스터 내 근로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생활편의 진작을 위해서 의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상업시설을 확충하여 “고밀도의 住·商·工 복합단지”로 재편하는 노력을 통칭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근로복지시설의 도입도 강조되는데, 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축구장·농구장 등 체육시설 뿐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등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추세이다. 또한, 유희부지에 행복주택 등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 시도되는 추세이다(김진, 2015: 49-50, 55-56). 이미 용도지역지구로 분절되어 있는 세종시에는 적용이 쉽지 않겠으나,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대전역 일대 코레일부지 등 시(市)의 노력에 따라서 몇몇 거점을 개발하여 개발사업을 진작할 뿐더러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관련하여, 향후 대전·세종은 신규 주택공급 시에 싱가포르의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 주택개발청) 주택을 도입하는 시도 역시 고려해 볼직하다. HDB주택은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인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양호한 대출(LTV 80%, 금리 2%)을 지원 받으면서 HDB로부터 주택의 건물분 소유권만을 양수한 후 처분 시 가격상승분·감가상각분을 조정하여 HDB에 환매하는 방식의 주택이다(한겨레신문, 2006.12.08.). 적용 시에 토지소유권까지 함께 매각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체의 재무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법률 제개정이 소요되지 않고, 조례 일부 개정과 분양규칙 및 계약서의 정치화만으로도 시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재정난에 때문에 일시 대량공급은 곤란하지만, 점차 그 수량을 늘려나간다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추정해 본다.

〈표 1〉 대전시 아파트의 사용연수 현황 (2015년 8월 기준)

구분	합계	~5년	6~10	11~15	16~20	21~25	26~30	31년~
단지수	421	66	81	60	67	87	51	9
비율(%)	100.0	15.7	19.2	14.3	15.9	20.7	12.1	2.1

자료: 김용동, 2015: P 51

한편으로 규제 일변도 및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정책기조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시는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2015년 기준으로 21년 이상된 건축물이 34.9% 그리고 16년 이상된 건축물이 50.8%로 계수된다. 이는 리모델링·재건축 등 적극적인 개량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공동주택이 2030년에 50% 그리고 2040년에 80%를 상회할 것이라는 함의로 다가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를 외면하고 도시재생에만 천착할 경우 쇠락하는 원도심의 정비는 요원할 뿐 아니라, 도시 내 균형발전 역시 불가능하다. 과거처럼 도시외곽에 택지를 조성하여 기반시설을 대량공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반환경적·고비용적이라는 인식 역시 팽배하고 있다. 내부도시 정비 자체가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개발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적절하게 도시경제를 진작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시(市)가 선도적으로 자금을 투자·지원하면서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김진, 2017: 2-3).

현재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절차적인 문제점(과다한 규제·불합리한 절차·사업추진 투명성)도 누차 제기되지만, 무엇보다 2중·3중으로 부과되는 과다한 부담금과 이로 인한 사업성 악화 및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폭증이라 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이 대표적인데, 조세 및 타 부담금들과 2중·3중으로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부분 사업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사업 초기에 납부하게 강제함으로써 사업성을 위협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 역시 높은 동의요건(행위허가 시 4/5 이상), 안전진단비용 등 초기사업비 부담 뿐 아니라, 추가분담금 부담이 주된 애로사항인 것은 마찬가지이다(김진, 2017: 6-7).

〈표 2〉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부과목적	조세와 중복	-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교육세	- 양도소득세 등과 동일 목적의 개발부담금, 지방교육세와 중복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부담금 간 중복	- 상하수도 원인가부금 등 기반시설 확보 목적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보전 목적 부담금	- 상하수도 원인가부금 등 기반시설 설치 목적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등 보전 목적 부담금 통합
부과대상		-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미실현이익에 부과	-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폐지
부과시점		- 사업인가 시 납부종이 52.6%로 대부분 사업초기에 부과	- 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예)광역교통시설부담금(사업승인일부터 60일 → 착공허가일부터 30일)

출처: 자유광장 홈페이지(freedomsquare.co.kr) 게시자료

이런 폐단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도 도진개진이어서, 각종 부담금 뿐 아니라 과도한 기부채납시설 그리고 (법규에 없는) 인허가 전제조건 등이 사업비를 폭증시키고 있다. 안유진(2015)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약 55%)을 차지하는 것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용지인데, 인허가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설치를 요구하는 공공시설이 과다하여 택지공급단가를 높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지자체가 요구해 놓고도 일부 시설(예를 들면 호수공원)은 높은 유지관리비용이 예상되어 그 인수를 고의 지연함으로써 택지사업의 준공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김진, 2018: 48).

결론적으로 현재 대전·세종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징후는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반기 여러 거시경제 위험요인이 시현되고 국내경기가 빠르게 후퇴할 경우 대전·세종의 부동산시장 역시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호황·불황을 차치하더라도, 더 이상 개발사업을 사적 이익추구라는 편협된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산업으로 바라보는 균형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향후 대전시 내지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주택, 인프라, 산업 등 분절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반 분야를 통합하여 도시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도시 내 유희부지, 이전부지 또는 신규개발지에 서울의 상암DMC와 구로 디지털밸리와 같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배태하는 혁신클러스터로 개발하려는 정책적 갈급함 역시 요구되는 항목이다. 물론 산업진작의 이면에는 공익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싱가포르의 HDB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빠르게 노후화되는 대전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을 경원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부 지역은 이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시(市)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중복부과되는 부담금의 통폐합, 납부시기의 이연 등의 지원만으로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고, 부동산산업을 진작시키는 정책방안임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

9)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초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표준시설비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였다(총사업비 대비 재개발은 0.03%, 재건축은 0.02%). 도정법 시행으로 2006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적용되었다가, 2008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되었으나, 이후 오히려 현금 대신 공원·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변경되면서, 부담금액이 백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폐해는 서울 등 사업성이 양호한 곳보다 대전 등 지방 중대도시의 정비사업에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전북도민일보, 2015.06.30 기사 참조)



## 참고문헌

- 김용동(2015),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김진(2015),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혁신클러스터 조성, 대전발전연구원 편저, 대전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김진·김주영(2016), 공공선도형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주택기금의 개념모형,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2호, 47-66
- 김진(2017), 주거복지·도시재생 진작 위한 지역주택기금, 대전세종연구원·희망정책네트워크 주최 <정책엑스포 2017>, '사회통합정책II' 세션 발표자료
- 김진(2018), 분양시기 이연에 따른 소비자 지급금액의 변화, <부동산학연구> 제24권 제1호, 39-50.
- 노컷뉴스(2018.11.25.), 가계부채 1,500조원? 사실상 2,000조원?
- 뉴시스(2019.07.12.), 싱가포르 4~6월 분기 성장률 0.1% 증가.."10년 만에 최저"
- 연합뉴스(2018.10.07.), [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LTV 연도별·구간별 분포
- 연합뉴스포맥스(2019.07.10.), S&P, 올해 韓 GDP 성장률 전망치 2.4%→2.0%로 하향
- 전북도민일보(2015.06.30.), 100억 넘는 시설부담금, 재개발사업장 휘청
- 키움증권(2018.10.24), 2018 가계부채보고서 III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구조조정-
- 키움증권(2019.01.23.), 부채구조조정 의 서막 -부채구조조정의 발단과 변수 점검-
- 키움증권(2019.03.15.), 2월 금융 및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 키움증권(2009.05.10.), 부채구조조정 의 의미와 시사점 I -임대사업자 대출 구조조정 가능성-
- 한겨레신문(2006.12.08.), 싱가포르 "우린 땅이 좁다. 그래서 누구나 집이 있어야 한다"
- 한국경제신문(2019.07.15.), 골드만삭스 "日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 GDP 0.4% 감소 전망"
- 한국경제신문(2019.07.08.), 세종시 4-2생활권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모델하우스 12일 개관
- 한국은행(2019.05), 2019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 관세청 수출입통계([unipass.customs.go.kr](http://unipass.customs.go.kr))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http://stat.molit.go.kr))
- 위키피디아 영문 홈페이지([en.wikipedia.com](http://en.wikipedia.com))
- 자유광장 홈페이지([freedomsquare.co.kr](http://freedomsquare.co.kr))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r-one.co.kr](http://r-one.c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http://ecos.bok.or.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naacc.go.kr](http://naacc.go.kr))
- KB부동산 통계정보([onland.kbstar.com](http://onland.kbstar.com))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 5장

# 대전세종 지역축제의 경제적효과 검토와 활용방안

김동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술연구교수

# 대전세종 지역축제의 경제적효과 검토와 활용방안

김 동 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술연구교수

DAEJEON  
SEJONG  
FORUM

## I. 지역축제의 필요성

관광분야에서 축제는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경제적 성과라 함은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생산성과 주민의 소득을 증대 시킴을 통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홍준현, 1997). 이를 달리 보자면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관광산업은 접근이 용이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에서도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산업육성이 가능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다. 즉, 관광산업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삶의 질 향상, 주민단합 도모 등을 목적으로 개최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제에 대한 지역의 인식과 필요성을 견주어 보았을 때 축제 개최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공동체)의 참여와 주민단합을 전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축제의 급속한 증가와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획일성으로 인해 축제의 질이 하락하고 축제의 전문성 부족 및 지역 주민들의 소외되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창곤,2000; 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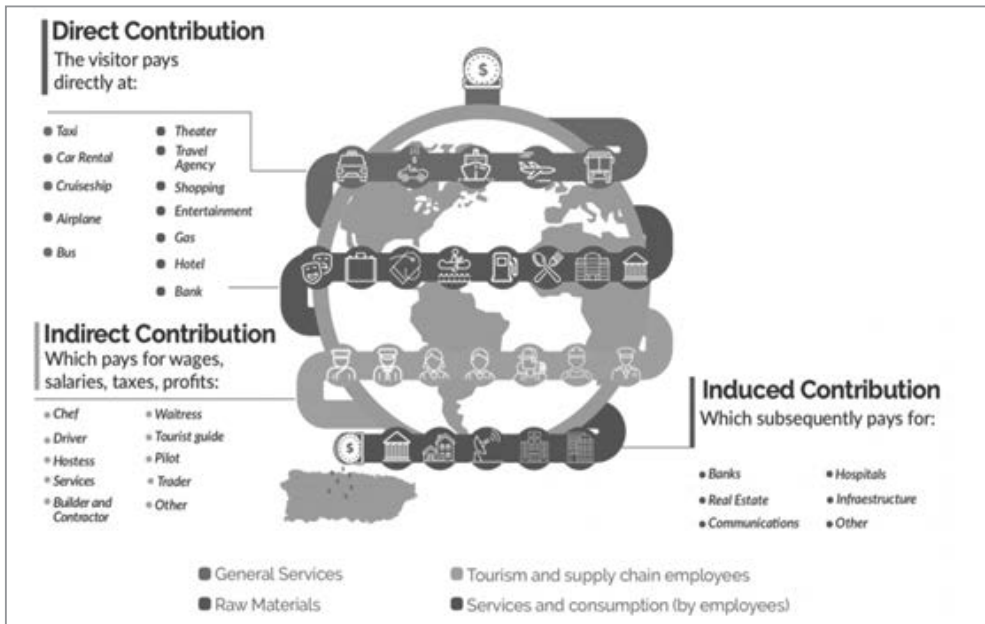
귀, 2002). 축제 기획단계에서 지역의 자연적 조건 혹은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도외시 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만(유사 프로그램, 따라하기식 축제)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축제에 맞는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예산 낭비 축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난립되는 지역축제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9년 「관광진흥법」 내에 축제 관련 조항을 신설(제48조의2)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축제 육성 및 진흥 정책을 운영 중이다. 비단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축제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근거로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기관들 또한 10여 개의 법률을 입법하고 법률에 따라 지역축제 타당성 검증과 운영·지원에 관한 정책 및 행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축제 유형을 '경제 활성화 축제'와 '지역주민 화합형 축제'로 구분하고 지역주민 화합형 축제와 같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축제는 과감히 없애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官)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하였다(국회사무처, 2016). 이처럼 지역축제에 있어 경제적 효과는 축제의 존폐 및 개최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축제의 경제차원 효과가 유효한지 여부는 이전부터 축제 정책 및 연구분야의 주요 관심분야로 자리하고 있다. 축제는 방문객 운집에 가장 효과적인 관광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제개최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지역으로 직접 유입 되는지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간접, 유발 효과 등 연계 산업군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권기철, 1997). 즉, <그림 1>과 같이 축제 개최로 인해 축제 방문객들이 축제장 뿐 아니라 지역에 다양한 사업군(호텔, 식당, 교통, 관광명소 등)의 소비를 하면서 방문자 경제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그 형성 과정과 규모 측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도 존재하며 직·간접적으로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규모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에 대해 고용노동부(2012)에는 정책사업의 경우 공공부문 사업지출로 인한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만 지역축제의 경우 공공부문의 사업비 지출효과보다 축제 참가자의 자발적 소비에 의한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자가 축제 참가자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제시한 바가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2013) 당시자료에 따르면 축제 산업의 규모를 약 3조 4,826억 원으로 산출하였고 이러한 규모는 문화 산업 중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콘텐츠산업보다 크고 영화 산업의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처: <https://www.foundationforpuertorico.org/visitoreconomy>

〈그림 1〉 방문자 경제 체계

-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인천 소래포구 축제는 축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2)
  - ▶ \*(결과) 지역축제 방문객 1,870만명의 총 지출액 5,281억원을 근거로 고용효과는 2011년 기준 36,300명(사업비 10억당 고용효과 283명)으로 나타남
  - ▶ \*(시사점) 지역축제는 공공부문의 사업비 지출에 의한 고용효과에 비해 축제참가자의 자발적 소비지출에 의한 간접적 고용효과가 훨씬 큰 점이 특징이며 정책사업 효과성에서 우위를 나타냄
- 화천 산천어축제는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 200명, 대학생 88명 등 총 288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오순환, 2011).
- 캐나다 스트랫포드 축제는 350명의 상시 고용과 축제 개최 성수기에는 1,000여명을 고용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신동호, 2007), 프랑스 아비뇽 축제는 축제운영협회에서 479명을 직접고용 하였음(배준구, 2007)

## II. 지역축제의 현황

### 1. 한국지역축제의 연혁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경제적 관점과 개최 동기 관점에서 구분되는데 그 시점은 1995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축제 개최 동기에 대해 기술한 것과 같이 1995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통 사회에서 많이 행하여 왔던 광대줄타기, 곡예와 같은 놀이 형태 축제와, 마을굿, 두레 형태의 마을 축제가 다소 축소되었다(박종삼, 2012). 이 시기에는 한국 지역축제가 일제의 탄압정책에 의해 미신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으며, 이후에는 식민정책이 더욱 본격화 되고 전쟁 발발로 인해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국가 역량이 집중 되어 축제는 국가정책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오순환·김대우, 2004).

지역축제가 명맥을 잊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단체장')이 선출되면서부터 지역축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단체장은 재임기간 동안에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단으로 비교적 추진이 수월한 축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4년 개최 축제 기준)에 따르면 82.5%가 1995년 이후에 최초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구체적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이전 시작된 축제는 191개(16.8%)인 반면, 지방자치체가 시작되고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수립한 예산이 적용된 1995년 이후부터 시작된 축제는 938개(82.5%)로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2014년 기준 지역축제 개최시작 연도별 현황

최초 개최 연도	축제 수	비율	
1995년 이전	191	16.8%	
1995 ~ 1999	174	15.3%	Since 1995 Total 938 (82.5%)
2000 ~ 2004	256	22.5%	
2005 ~ 2009	306	26.9%	
2010년 이후	202	17.8%	
모름	7	0.6%	
총계	1,136	100%	

## 2.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대전광역시 축제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한국의 축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축제 전반의 현황과 시사점, 향후 국가 축제 육성·운영 방향 등을 도출해왔다. 1996년 우리나라 최초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지역축제가 412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조사 결과 총 1,136개(마을축제 78개 제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에 대한 정의는 시대별로 달리 정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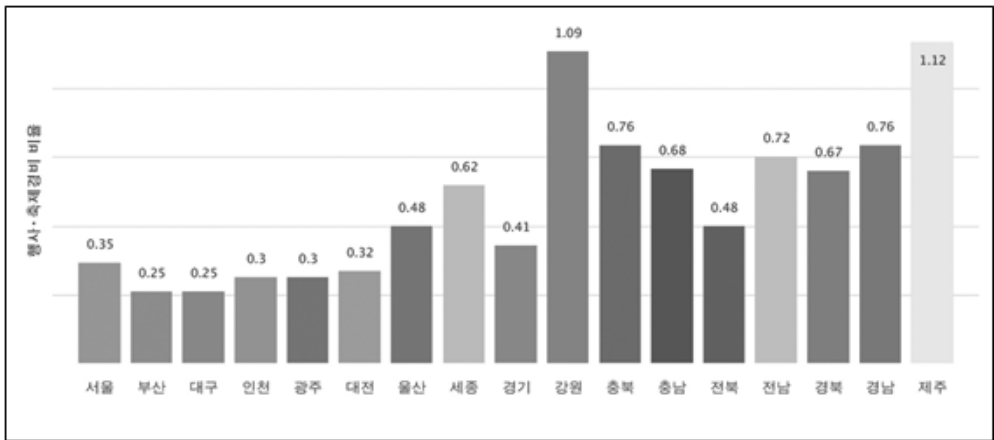
〈표 2〉 한국축제의 실태조사

구분	1996년 실태조사	2006년 실태조사	2016년 실태조사
특징	우리나라 최초 조사	심층적 현장조사 (정량 < 정성분석 중심)	역대 최대 규모의 전수 조사 지역축제 현황/특성 교차분석
축제 정의	포함	자치단체 단위에서 개최되는 모든 종류의 축제로 전통축제뿐 아니라, 문화제·예술제 등 문화행사 전반 포함	
	제외	- 전국적 규모의 행사 - 단순 문화행사 - 일회성 축제	- 3일 미만 / 격년제 축제 - 단순 문화행사 - 일회성 축제
지역 축제	총 412개	총 480개	총 1,136개
조사일시	1996.09~11월	2005년 말~2006년 초	2015.02~12월



실태조사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 한 해 동안 행사·축제경비(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를 편성한 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금액을 보았을 때 전적으로 0.52%의 예산을 축제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0.32%를 편성하여 전국평균보다 하회 하는 데 반해 세종의 경우 0.62%로 전체 기준에 상회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자치구를 보았을 때 예산배정은 대전서구 → 대전유성구 → 대전중구 → 대전대덕구 → 대전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개최 건수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 52개임을 감안할 때 대전과 세종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http://lofin.mois.go.kr>

〈그림 2〉 2019년 기준 전국 행사·축제경비 편성내역

〈표 3〉 2019년 기준 대전광역시 행사·축제 경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 = (B/A)*100
대전본청	3,845,524	11,874	.31
대전동구	452,107	1,007	.22
대전중구	418,276	1,493	.36
대전서구	626,382	2,092	.33
대전유성구	474,332	1,996	.42
대전대덕구	374,800	1,169	.31

〈표 4〉 2019년 기준 전국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개)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82	93	44	25	31	8	13	20	2	105	68	49	92	50	107	68	66	40

또한, 이와 별도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해 동안의 축제 개최계획을 취합하여 공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축제에 대한 정의는 “일정기간(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 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로 ①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 ②지자체 주최(주관)하는 축제/ ③지자체에서 경비 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④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축제/ ⑤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를 포함하여 축제명, 개최횟수, 프로그램, 축제예산, 방문객 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19년에 총 15개의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며, 2019년 축제 개최 예산은 6,07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초 축제 개최년도와 횟수를 보았을 때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개최된 축제는 유성온천문화제(1989년 최초개최)가 유일하며, 이외에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동기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5〉 2019년 기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축제 개최 세부현황

자치단체	축제명	최초개최 년도(횟수)	축제예산 (단위 : 백만 원)	방문객 수 (단위 : 천명)
대전시 대덕구	금강로하스축제	2011년도 (8회)	200	100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문화제	1996년도 (23회)	60	20
대전시 대덕구	장동계족산 스모스축제	2014년도 (6회)	20	30
대전시 대덕구	계족산맨발축제	2006년도 (12회)	200	40
대전시 시자체	우리농수축산물큰잔치	2002년도 (17회)	224	100
대전시 시자체	2019 동물보호 문화축제	2015년도 (5회)	100	35
대전시 서구	제32회 DICU FESTIVAL	2004년도 (32회)	35	16
대전시 시자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2000년도 (22회)	1160	235
대전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1989년도 (26회)	880	649
대전시 유성구	유성국화전시회	2010년 (10회)	237	500
대전시 중구청	제5회 대전칼국수축제	2013년도 (제4회)	180	90
대전시 중구청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2008년도 (11회)	830	221
대전시 서구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2016년 (4회)	734	25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축제	2013년 (7회)	1,000	18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조직원복숭아축제	2003년 (17회)	210	40

### III. 대전지역의 지역산업연관표

#### 1.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 경제구조와 더불어 지역 간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행렬 형태의 통계표이다. 현재 2015년 10월에 발표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는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는 지역간 재화 및 서비스 흐름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정책 수립과 지역산업 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의 연구에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산업연관분석 모형 중 지역 간 산업연관 모형을 보여준다. 산업연관 모형은 지역 내 기술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내 효과와 더불어 지역 간 상호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교역 구조를 반영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지역 간 산업연관 모형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동일한 산업 분류에 포함되어도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와는 구별된 독자적인 재화나 서비스라고 가정한 것으로 지역과 지역 간 교역구조를 기술 구조에 반영한 것이다(고두갑·곽수경·장훈, 2016). 이와 같은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역내 산출액
		지역 1		...		지역 r		지역 1		...		지역 r		
		산업1	...	산업n	...	산업1	...	산업n	소비	투자	수출	...	소비	
국 산 투 입	지역 1 : 산업1 : 산업n	Z <sub>11</sub>		투 입 구 조 ↓	Z <sub>1r</sub>		Y <sub>11</sub> <sup>d</sup>		...		Y <sub>1r</sub> <sup>d</sup>		X <sub>1</sub>	
	지역 r : 산업1 : 산업n	Z <sub>r1</sub>			Z <sub>rr</sub>		Y <sub>r1</sub> <sup>d</sup>		...		Y <sub>rr</sub> <sup>d</sup>		X <sub>r</sub>	
	수입 투입 : 산업1 : 산업n	M <sub>1</sub>			M <sub>r</sub>		Y <sub>11</sub> <sup>m</sup>		...		Y <sub>r1</sub> <sup>m</sup>			
	부가가치	V <sub>1</sub>			V <sub>r</sub>									
	지역내 산출액	X <sub>1</sub>			X <sub>r</sub>									

<그림 3>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2. 대전지역의 관광산업승수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고부가가치인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이 해당 지역 내/외에 발생시키는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대전지역 관광산업의 승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3 지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전체 산업을 28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관광과 연관 있는 산업을 정리하여 관광산업 승수를 도출하였다(김한주, 2016). 대전광역시 관광산업의 모든 승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산업평균 승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광역시에서 관광산업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타 산업의 투자보다는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광역시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승수를 살펴보면, 여행업(1.79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8개 산업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어서 관광교통업(1.7661), 숙박업(1.6608), 도소매(1.63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승수의 경우는 숙박업(0.9155)이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0.9096), 관광교통업(0.9059), 여행업(0.82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유발승수의 경우는 관광교통업(0.0353), 숙박업(0.0349), 도소매(0.0262), 음식점업(0.0218), 여행업(0.02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지역산업연관모델에 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산업 승수

구 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승수	순위	승수	순위	승수	순위
도소매(쇼핑업)	1.6374	10	0.9069	5	0.0262	5
관광교통업	1.7661	4	0.9059	6	0.0353	3
여행업*	1.7911	3	0.8232	9	0.0218	10
음식점업	1.5075	15	0.5904	16	0.0218	9
숙박업	1.6608	8	0.9155	4	0.0349	4
문화오락서비스업	1.5864	13	0.8051	11	0.0206	11
전 산업평균	1.5349	-	0.6779	-	0.0176	-

출처: 김한주(2016),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광역시도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이에 관한 연구

\* 여행업 : 여행알선, 화물중개, 선박 및 항공기중개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활동과 화물의 포장활동 및 수출화물에 대한 각종 검수 및 대리활동을 포함

### 3. 대전지역 관광산업의 영향력 승수

관광산업의 영향력 승수는 특정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생산물 단위 중에서 타 지역에 파급되는 생산물 단위의 평균적인 비율을 말한다(한국은행, 2009). 이는 승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나면 지역 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승수가 '1'보다 작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지역 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한주, 2011).

지역산업연관모델에 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산업의 영향력 승수를 살펴보면, 음식점업(0.9821)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전광역시에 지역축제를 통해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하게 되면 대전광역시 지역 내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광역시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지역축제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지역산업연관모델에 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산업 영향력 승수

구분	승수	순위
도소매(쇼핑업)	1.0668	10
관광교통업	1.1506	4
여행업*	1.1669	3
음식점업	0.9821	15
숙박업	1.0820	8
문화오락서비스업	1.0335	13

출처: 김한주(2016),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광역시도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이에 관한 연구

\* 여행업: 여행알선, 화물중개, 선박 및 항공기중개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활동과 화물의 포장활동 및 수출화물에 대한 각종 검수 및 대리활동을 포괄함

## IV. 지역축제의 효과

### 1. 문화관광축제의 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관광축제는 관광·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 운영 우수성, 축제 발전역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을 파악해보면, 최근 3년 평균 1인당 52,171원을 소비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53,661원으로 나타났다. 각 년도 별 방문객 소비지출의 등락은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약 5만원 수준의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변화

(단위 : 원)

년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2006	9,542	15,382	5,056	14,886	4,108	48,974
2007	8,521	16,761	5,605	17,317	4,708	52,912
2008	7,707	15,128	5,150	14,876	5,393	48,254
2009	7,944	16,902	4,695	14,974	5,601	50,116
2010	8,712	16,163	4,777	14,846	4,112	48,610
2011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817
2012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2013	9,395	17,392	5,709	12,285	5,349	50,131
2014	11,135	21,099	5,548	13,233	5,445	56,460
2015	9,478	16,144	4,978	10,607	6,924	48,131
2016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b>최근 3년 평균</b>	<b>10,100</b>	<b>18,077</b>	<b>5,555</b>	<b>12,372</b>	<b>6,067</b>	<b>52,171</b>
2017	10,416	19,013	5,361	12,064	6,807	53,66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더불어 문화관광축제는 전통역사 유형, 문화예술 유형, 지역특산물 유형, 생태자연 유형, 주민화합 유형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을 기준으로 2017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1인당 소비지출은 평균 66,684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특산물축제, 문화예술축제, 주민화합축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식음료비 19,013원, 교통비 13,023원, 쇼핑비 12,064원, 숙박비 10,416원, 기타 6,807원, 유희비 5,361원 등의 순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표 9〉 2017년 문화관광축제 축제 유형별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단위 : 원)

구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타	합계
평균	13,023	10,416	19,013	5,361	12,064	6,807	66,684
전통역사축제	10,495	6,434	15,273	3,893	10,258	3,672	50,026
문화예술축제	15,282	13,543	25,677	6,358	9,959	10,377	81,198
지역특산물축제	15,378	14,540	20,684	7,194	20,666	6,092	84,554
생태자연축제	10,577	6,901	11,980	3,782	7,429	7,200	47,869
주민화합축제	12,673	9,537	18,595	5,231	10,468	7,614	64,11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2. 대전·세종의 문화관광축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로는 전통역사 유형으로 분류되는 대전의 효문화뿌리축제가 유일하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10년이 넘는 축제로 2019년 9월에 효통! 즐거운세상! 따뜻한 효심으로 통하는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제 11회 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2017년 기준 35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파급력 있는 대전광역시 대표 축제라 할 수 있다.

〈표 10〉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역사

차수	개최년도	기간	주제	방문객 수
1	2008	10.11-10.12	민족의 뿌리, 문종의 뿌리, 문화뿌리를 찾아서	35,000명
2	2010	04.17-04.18	민족의 뿌리, 문종의 뿌리, 문화뿌리를 찾아서	150,000명
3	2011	10.07-10.09	즐거 효! 함께해 효!	150,000명
4	2012	05.25-05.27	대한민국의 姓氏 이야기 뿌리문화의 향연	155,685명
5	2013	10.11-10.13	3대(과거,현재,미래)가 함께하는 효 세상!	207,375명
6	2014	09.26-09.28	효의 향연을 통해 "행복한 세상 만들기"	297,894명
7	2015	10.09-10.11	나의 뿌리를 찾아서! 과거·현재·미래 3대가 함께 하는 효 한마당	325,930명
8	2016	09.23-09.25	효통한마당! 고마워 효(부모), 감사해 효(친구), 사랑해 효(젊음)	330,555명
9	2017	09.22-09.24	나의 뿌리를 찾고 효를 즐기다! 찾아효! 축제를, 함께해효! 3대가 즐겨효 축제를	350,732명
10	2018	10.05-10.07	자연속 효통 놀이세상 사랑해효! 즐겨효!, 감동해효	정보 없음
11	2019	09.27-09.29	효통! 즐거운세상! / 따뜻한 효심으로 통하는 즐겁고 행복한 세상	정보 없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2017년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4,82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52.5%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지출항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비지출 확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관광학 측면으로 축제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발굴 등을 통해 추가적인 관광활동으로 연결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표 11〉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변화

(단위 : 원)

구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2016	7,298	9,049	15,205	5,526	12,104	688	49,870
2017	5,774	5,471	9,349	3,072	8,355	3,021	35,042
전체축제평균	13,023	10,416	19,013	5,361	12,064	6,807	66,68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년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방문한 방문객에 의해 발생된 직접지출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약 123억원이었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식음료비(약 33억원), 쇼핑비(약 29억원), 교통비(약 20억원), 숙박비(약 19억원) 등의 순으로 높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2017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방문객을 통한 직접지출효과

(단위 : 원, 백만원)

구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5,774	5,471	9,349	3,072	8,355	3,021	35,042
직접지출효과*	2,025	1,919	3,279	1,077	2,930	1,060	12,290

\*직접지출효과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과 방문객 수를 곱하여 산출함

2017년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방문객을 통해 발생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19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9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31명으로 나타났다.

〈표 13〉 2017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방문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생산유발효과	3,577	3,187	4,943	1,709	4,798	1,681	19,895
부가가치유발효과	1,835	1,757	1,936	867	2,658	853	9,905
고용유발효과(명)	71	67	71	22	77	22	331

\*기타비의 경우, 문화오락서비스업의 승수를 활용하여 산출함

충청남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보령머드축제의 경우 1998년 생산유발 효과 35억원에서 2017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996억원으로 성장하였다(충남일보, 2017. 09. 21). 이처럼 약 20년 간의 보령머드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22년에는 보령해양머드엑스포로 확대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개최 지원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

## V.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전 지역축제의 방향

그동안 축제는 지역으로 방문객들을 운집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관광 정책으로 주목받아 왔다. 즉,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수단이라고 여겨져 왔다. 축제 방문객들이 개최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소비가 발생되고 이러한 소비는 지역 내에서 연쇄적인 후방효과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대전광역시의 관광승수에 따르면, 지역축제는 대전·세종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서비스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경제파급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축제의 수는 적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별한 자원 없이도 개최가 가능한 지역축제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축제를 활용하여 대전·세종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축제 증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축제 기획단계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지역의 생활과 특성을 축제 소재와 연계하여 소비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기획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소비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적

로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축제가 발전하고 확대되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92년 일본 축제법인 「地域・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施による・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する法律」(Act on the Promotion of Tourism and Specific Regional Industries through Traditional Festival and Events)을 입법하고 법 제3조에 ‘축제가 지역경제에 어떻게 연계’되어 추진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축제 운영에 활용되는 상공업 상품(특정사업, 활용을 별도 정의)’을 축제 계획단계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박상훈·손신욱, 2017).

둘째, 축제와 주민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지지 기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축제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이고 주민들의 문화가 축제의 콘텐츠가 될 때 일본의 마쓰리와 같이 비로소 지역축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대전·세종 지역에서도 지역축제 개최가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사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일탈성과 난장성 성격을 지닌 이벤트를 축제로 발전시키고 대전·세종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의 한강에서 개최되는 ‘밤 도깨비 야시장 축제’는 지역과 연관이 비교적 부족한 주제임에도 축제의 성격 중 일탈성과 난장성을 활용하여 축제로 발전시키고 서울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킨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매주 토요일(2019.05.04.~10.05.) 대전 중앙시장에서 대전 토토줄 페스티벌(야시장, 스카이로드 DJ 댄스파티)을 지속적으로 개최 중에 있다. 토토줄 페스티벌은 시가지에서 개최되는데, 이러한 이벤트를 축제 정책적 영역에서 전략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축제 특성이 있는 이벤트를 정책영역으로 포괄하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 대전 토토줄 페스티벌과 같은 이벤트를 대전의 새로운 축제와 관광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대전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이며,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축제들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객을 보다 많이 유치해야 한다. 또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유입되는 외국인들에게 대전의 축제를 비롯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탐구하고 연구하여 대전의 새로운 축제, 콘텐츠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권기철(1997), <지역경제이론과 정책>, PUFs.
- 고두갑·곽수경·장훈(2016),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서남권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목포본부.
- 고용노동부(2012), <관광이 지역경제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 지역축제 및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 김창근(2000), 문화관광축제운영의 활성화 연구, <산업연구> 제13권, 359~382.
- 김한주(2011),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6대 권역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23권 6호, 5~21.
- 김한주(2016),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광역시도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이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8권 5호, 61~81.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박경귀(2002), 문화정책의 집행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세계춤축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4호, 1~24.
- 박상훈·손신욱(2017), 관광법제 측면에서 본 한국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의 축제 입법례와 비교하여, <관광연구> 제32권 6호, 187-209.
- 배준구(2007), 프랑스의 문화산업클러스터 : 아비뇽 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14, 37-63.
- 신동호(2007), 캐나다 스트랫포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 셰익스피어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0권 3호, 263~280.
- 오순환(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마케팅, <열림축제포럼 : 축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한시선> 서울문화재단
- 충남일보(2017), 보령머드축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 '톡톡',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30>
- 홍준현(199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력산업선정 방법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7권 1호, 129~152.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 대전 사회적경제 주도 블록체인 기반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 전략

김성훈 사회적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대전 사회적경제 주도 블록체인 기반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 전략

김성훈<sup>1)</sup> 사회적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DAEJEON  
SEJONG  
FORUM

## I. 지역화폐와 지역사회의 위기

### 1. 관행 지역화폐가 유행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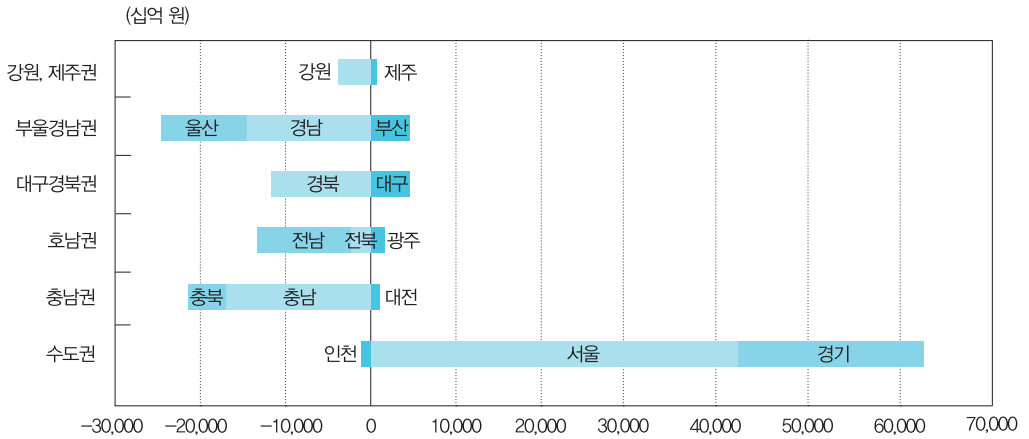
지난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 e로움이 출시되었다. 대덕구 중리 행복길에서 맥주페스티벌 행사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대덕 e로움은 출시 이틀만에 10억원의 사용이 있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5년 내 500억원의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향후 노인과 이동수당 등 정책 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러한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는 전국적으로 69곳(광역 2, 기초 67)을 넘어서고 있으며 발행액도 지역화폐 지난해 3천714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를 ‘관행 지역화폐’라고 부르고자 한다. 관이 발행하고 관이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최근 관행 지역화폐 유행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 창성회의 의장 마스다 히로아는 2014년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권역별 소득의 역외유출 통계자료를 보면 극점사회는 현재 진행형이다.

1)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초대 간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지역화폐 프로젝트의 참여기관인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책임연구원.



〈표 1〉 권역별 소득의 역외유출현황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 구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201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9세 여성의 인구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기는 단지 위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표 2〉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고령화지수(2015년, 단위 명)

구분	총인구	15세미만	15~64세	65세이상	65세이상 인구비율
전국	20,617,045	7,039,594	36,953,331	6,624,120	13.1%
서울	9,860,372	1,189,969	2,495,941	1,187,432	12.0%
부산	3,400,069	403,062	1,810,064	501,066	14.7%
대구	2,454,733	332,374	2,168,476	312,295	12.7%
인천	2,886,172	414,581	1,111,687	303,115	10.5%
광주	1,516,527	236,186	1,142,500	168,654	11.1%
대전	1,535,639	230,590	870,069	162,549	10.6%
울산	1,142,469	174,413	141,240	97,987	8.6%
세종	197,345	34,639	870,069	21,466	10.9%
경기	12,397,902	1,910,166	9,207,669	1,280,067	10.3%
강원	1,506,142	196,866	1,050,445	258,831	17.7%
충북	1,560,784	219,222	1,107,698	233,864	15.0%
충남	2,089,470	299,563	1,444,992	344,915	16.5%
전북	1,798,234	250,026	1,216,335	331,873	18.5%
전남	1,756,831	234,745	1,134,821	387,265	22.0%
경북	2,641,879	336,822	1,818,946	486,111	18.5%
경남	3,285,260	480,794	2,341,423	463,043	14.1%
제주	587,217	95,576	408,054	83,587	14.2%

자료: 통계청 (2014.12)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자료 <http://kosis.kr/> 정리

자료: 박진경·김선기(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역외유출은 단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국내에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을 73%에 이르며 배당금 1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표 3〉 2017년 국내은행의 이익 및 배당 현황(억원, %)

구분	당기순이익	배당금	배당성향	외인지분율	외인배당금
국민	22,629	6,401	28.3	69.39	4,447
신한	16,078	5,400	33.6	68.87	3,719
하나	19,547	9,726	49.8	74.03	7,200
우리	12,761	4,040	31.7	27.25	1,101

지방의 부는 서울이 빨아들이고, 서울의 부는 외국의 글로벌 자본이 빨아들이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대덕구가 가장 먼저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5개구 중 인구가 가장 적으며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18만명이 곧 붕괴될 전망이다.

대덕구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역외유출이 일어나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소멸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관행 지역화폐 유행 현상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사회경제 인프라 부족과 그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교육지책일 것이다.

## 2. 관행지역화폐의 특징

한국에서 관행지역화폐의 유행을 선도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였다.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 지역화폐는 성남 골목상권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복지와 지역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2108년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남의 실험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2) 브리스톨파운드는 발행액만큼의 실물화폐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분위제 방식의 화폐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물통화와 온라인/모바일(SMS 활용)결제 방식을 병행, 브리스톨파운드의 운영을 위하여 시 정부, 지역 금융기관, 지역 사회혁신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모형을 구축, 브리스톨파운드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인 지역공동체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이 담당하여 운영, 브리스톨 시 정부는 사무공간과 초기(3년)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세 일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문진수, 지역화폐와 지역순환경제구축)

3) Yasuyuki Hitora (2014),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ICSEA,

관행 지역화폐의 특징은, 첫째 화폐 발행과 운영의 주체가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의 세금을 쓰고 그 행정력과 신용에 기반하여 지역화폐를 유통시킨다.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나 프랑스의 솔 비올레트와 같이 지방정부가 화폐발행비용이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세금을 지역화폐로 받는 경우라도 그 주체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민간 결사체(Association)가 맡는 것과 대조적이다.<sup>2)</sup>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의 문제를 보완하거나 대안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자율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나아가 ‘보다 작은 시장, 보다 작은 정부, 보다 많은 민의 호혜와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을 갖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법정화폐와 환전하는 상품권 방식이다. 레츠(LETS; 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나 타임달러(Time Dolla)가 불태환 화폐인 것과 구분할 수 있다. 불태환 지역화폐는 회원제에 기반하여 특정 공동체 내부에서만 통용되므로 법정 화폐의 여러 문제로부터 자율적이다. 이 두 시스템이 법정화폐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이자가 없다는 것이다. 히로다 야스유키는 법정화폐의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①은행의 부채를 통한 통화 발행, ②복리와 단기주의, ③친-경기순환적 성격의 문제가 있다.<sup>3)</sup> 불태환 화폐는 그 사용자와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지와 돌봄 등의 비시장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법정화폐가 필요한 시장거래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금 지원을 통한 할인율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지역화폐는 중앙정부로부터 4%의 지원을 받아 6~10%의 할인을 한다. 환전의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화폐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독일의 킴가우어 시스템의 경우 3%의 인센티브를 구매자에게 주지만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프로젝트에 기부할 권한을 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또한 그 화폐를 받는 가맹점이 법정화폐로 환전하고자 할 경우, 5%의 과징금(charging)을 매기는 것은 가급적 환전을 하지 않아야 역외유출 저지력이나 호혜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책발행’이다. 경기도는 2019년 6월 9일 기준으로 1,276억원을 발행하였고 그중 667억원을 정책발행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청년기본소득 257.8억 원, 산후조리비 131.3억 원, 그밖에 아동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277.8억 원으로 발행하였다. 이 정책발행은 관행지역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강점일 수 있다. 최근 전라도의 경우 농민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지역화폐-지역경제활성화”의 패키지가 지방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프랑스 툴루즈시의 솔 비올레트의 경우 실업수당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툴루즈시가 보조하지만 민간운영주체를 경유하도록 하는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 3. 지역화폐는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과 취지를 갖는다.



자료:지역화폐의 기대효과(2017, 문진수)

〈그림 1〉 지역화폐의 기대효과

민간 주체인든 관 주체인든 지역화폐에 대한 정의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의 의미라면, 이러한 지역화폐는 결코 지방소멸에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배우고, 일하고, 노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먹을거리, 입을 거리, 배울 거리, 일거리, 놀 거리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화폐 이전에 지역민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골목골목을 점령하고 있는 편의점, 프렌차이즈 상점, 대형유통마트, 은행에서 결제한 돈은 어디로 가는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으로 글로벌 유통자본과 금융자본이 만든 상품을 결제한다면 그 결제한 대금은 결국 뉴욕의 월가나 런던의 금융가로 가게 될 것이다.

특히 관행지역화폐의 경우, 정부의 힘으로 손쉽게 지역화폐를 발행 유통시킨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위에서 지적한대로 지역화폐로 결제할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민의 자발적 호혜와 연대를 키우기보다 자치단체장이나 관, 세금에 의존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환전 과징금이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재사용, 순환사용하지 않고 100% 환전하기 때문에 역외유출 저지가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다.

지역화폐는 단지 특정 지역의 결제수단이라 정의한다면 결제할 대상이 지역사회에 기반해 있어야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이렇게 정의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산업생태계에 기반하여 그들 간의 상호부조, 호혜거래를 위해 지역민이 스스로 발행하는 이자 없는 돈”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한발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 II. 대전의 지역화폐 경험

### 1.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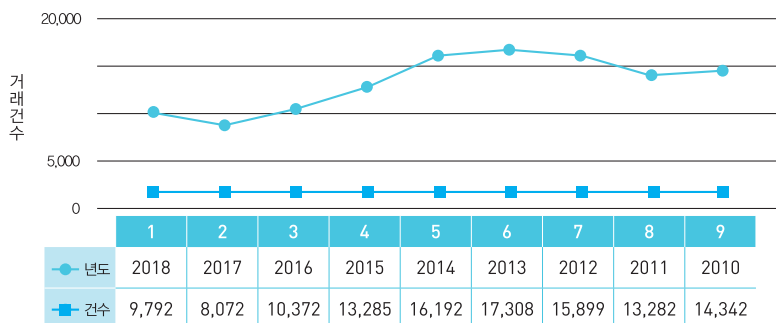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1999년 대전의제 21추진협의회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박용남의 제안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2002년 회원 200명이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며 정식 단체로 출범하였다. 2018년 말 현재 662가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35개 생산자회원(가맹사업자) 보유하고 있다. 지점으로 대전의 원도심 지역에 원도심레츠를 마을기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 한발레츠 생산자회원 현황

구분	업종	가맹사업자 수(개)
보건의료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6
카페	커피, 전통차	2
문화예술	예술극장, 공연, 출판, 편집디자인 등	4
농산물	농산물, 발효식품(된장 등), 유정란, 착즙음료 등	11
가공식품	빵, 떡 등	3
도소매	인테리어소품, 화장품, 유제품, 조미김 등	7
서비스	사진, 피부마사지	2

한발레츠의 지역화폐 두루는 2018년 거래량 9,792건, 거래금액 약 2억 7천만원 가량으로 2013년(17,308건, 약 4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한발레츠의 연간 거래건수



2003년 '지방의제21' 전국우수사례로 꼽혔고, 2005년 일본 '지역통화세미나 in EXPO 2005'에 소개되었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지역화폐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발레츠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면서 가장 큰 불편으로는 거래물품의 제한(71.8%)과 사용의 불편(11.8%)을 꼽았으며 한발레츠 역시 총회에서 가맹점 확대와 거래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 2. 품앗이 생협의 경험

품앗이생협은 법정화폐와 교환되는 태환 방식의 지역화폐 '품'을 2014년에 발행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역화폐 실험을 시작 하였다. 기존의 지역화폐는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의 신뢰에 기반한 거래 방식이었다면 '품'은 법정화폐와의 교환을 약속하여 보다 낮은 신뢰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실험을 전개하였다. 품앗이생협의 '품'은 조합원에게만 발행하여 대전 세종의 6개의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식료품과 생활재를 구매할 수 있다. 2014년 약 1,200만원을 '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조합원이 '품'을 구매할 때, 3% 할인 이익을 주어 '품'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후 출자금과 조합비, 조합의 각종 이벤트 행사에 품을 발행하여 조직활동과 연계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약 26,000만품을 발행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정기적으로 '품'으로 교환(매월 20만원 등)하여 사용하여 선수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카드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지권 발행비용과 교환-환전 업무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상품권 할인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한계가 있고, 카드사용에 비하여 편리성이 적어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 3. 대전의 지역화폐 경험을 통해 본 과제

그간 대전의 지역화폐의 실험은 크게 다음 표의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6〉 대전지역 지역화폐의 효과와 한계점

	한발레츠 ‘두루’	품앗이생협 ‘품’	지자체
형태	레츠 (거래를 온라인 장부에 기록)	김가우어 (상품권 형식의 종이화폐 발행)	지류+전자지갑+카드 등 다양
도입시기	1999년	2014년	2019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호혜적 교환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li> <li>·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주민간 품앗이거래를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구매를 촉진하여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li> <li>· 카드수수료 등의 거래수수료 비용을 절감</li> <li>· 호혜소비자로서 조합원의 정체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확보에 용이</li> <li>· 지방정부의 신용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 확보에 용이</li> <li>· 정부 인프라(세금과 시설)를 활용한 유익이 큼</li> </ul>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과 거래할 수 있는 상품 항목이 제한적</li> <li>· 거래체계가 복잡하고 불편함</li> <li>· 법정화폐와 교환되지 않는 신뢰기반의 교환 수단이어서 전면적인 결제수단이 되지 못함 (거래액의 일정 한도로 제한, 약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지폐의 위변조 위험성</li> <li>· 환전과 상품권 보관 등 이용자 불편 초래</li> <li>· 환전, 결제, 지폐 대조 등 화폐관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비효율적.</li> <li>· 발행비용 과다 발생 (위변조 방지 인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사용에 그쳐 역외유출 저지력에 한계</li> <li>· 할인율, 시스템 유지 등에 따른 비용의 지속발생</li> <li>·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li> </ul>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기관)과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참여기관)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 R&D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2020년까지 융복합형 대전형 지역화폐를 완성할 예정이다. 1999년 한국사회 지역화폐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품앗이생협의 지역화폐 실험, 그 외 석교동의 벼, 어은동의 고리 등의 마을단위 지역화폐의 실험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대덕구로부터 시작되어 대전광역시나 각 구로 확산되어갈 관행지역화폐와도 협력하고자 한다. 과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대전지역 지역화폐의 개선과제

기존한계		개선과제
• 협소한 거래품목	➔	• O2O 유통 플랫폼 구축
• 화폐 환전불가	➔	• 기부포인트+레츠+환전의 동시 사용 플랫폼 구축
• (민간)재원 및 신뢰 부족	➔	•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관행지역화폐와의 연계
• 거래장부 수기관리의 불편함	➔	• 모바일 기반 간편거래 시스템개발
• 보안 기술의 높은 비용	➔	•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 Ⅲ. 민간주도 대전형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 1. 독일의 김가우어 시스템 모델의 시사점

위의 과제를 가지고 대전형 지역화폐를 설계함에 있어 주목한 모델은 독일의 김가우어 모델이다. 김가우어는 “커뮤니티 내 통화를 묶어두고 순환하기 위해 독일 로젠하임과 트라운슈타인 카운티와 로젠하임시, 바바리아에서 사용되는 유로기반 지역통화다(Gelleri, 2009). 이 계획은 2003년 1월 발도르프학교 여학생 6명이 참여한 과외활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가우어 시스템의 특징은, 법정화폐와 환전하는 방식이지만 지역화폐 소비자에겐 3% 기부권리를 준다는 것과 가맹점에겐 5%의 환전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에 있다. 또한 실비오 게젤의 감가하는 화폐 원리에 따라 3개월마다 -2%의 이자를 매겨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손해 보도록 설계하여 화폐축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김가우어의 연간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00억원이 넘는다.<sup>4)</sup> 김가우어 사회적 프로젝트 253개를 선정하고 소비자들이 김가우어를 구입할 때 얻는 3% 기부권리로 후원된 사회적프로젝트 기부액이 2013년 기준 원화로 약 7,800만 원에 이른다. 김가우어는 최근 금융협동조합 레기오스를 창립해 지역화폐와 법정화폐로 소액대출을 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이자를 돌려주는 은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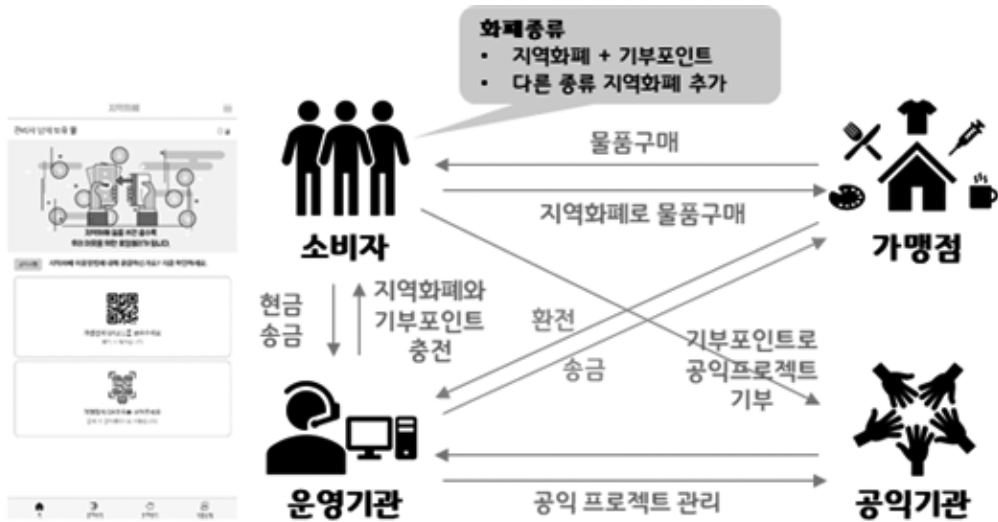
〈표 8〉 독일 지역화폐 김가우어 핵심지표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소비자	130	700	1,337	1,899	2,470	2,769
사업체	100	380	631	587	593	627
사회프로젝트	5	50	158	200	233	253
순환중인 김가우어	10.000	50.108	165.648	327.458	498.906	520.514
사회적 프로젝트 기부	1.800	10.498	26.272	39.150	52.128	59.282
김가우어 매출액	75.873	699.834	2,304.571	3.974.927	5,585.021	6,826.105
김가우어 순환속도(년)	9.48	16.78	19.35	13.72	11.42	12.82
독일 내 유로 순환속도(년)	6.78	6.21	6.16	4.82	4.42	3.88
독일 내 유로 대비 김가우어 순환속도의 빠른정도	1.40	2.70	3.14	2.85	2.58	3.31
김가우어 승수효과	1.11	2.00	2.63	3.10	3.27	3.33

자료: Yasuyuki Hitora (2014),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ICSEA, 이경수(역) (2014) (아이콥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서울: (재)아이콥협동조합연구소.

이번 산자부 지역화폐 프로젝트의 경우 3개월 -2%의 감가 규칙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김가우어 시스템을 모델로 진행된다. 나아가 한발레츠의 레츠 시스템도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다. 이를테면 한발레츠가 현금과 지역화폐를 동시에 거래하는 데 이때 현금은 환전 유형 지역화폐로 하고 두루는 레츠의 계정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 관행 지역화폐 역시 이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다.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4) 김가우어 홈페이지 자료 [https://www.chiemgauer.info/fileadmin/user\\_upload/Dateien\\_Verein/Chiemgauer-Statistik.pdf](https://www.chiemgauer.info/fileadmin/user_upload/Dateien_Verein/Chiemgauer-Statistik.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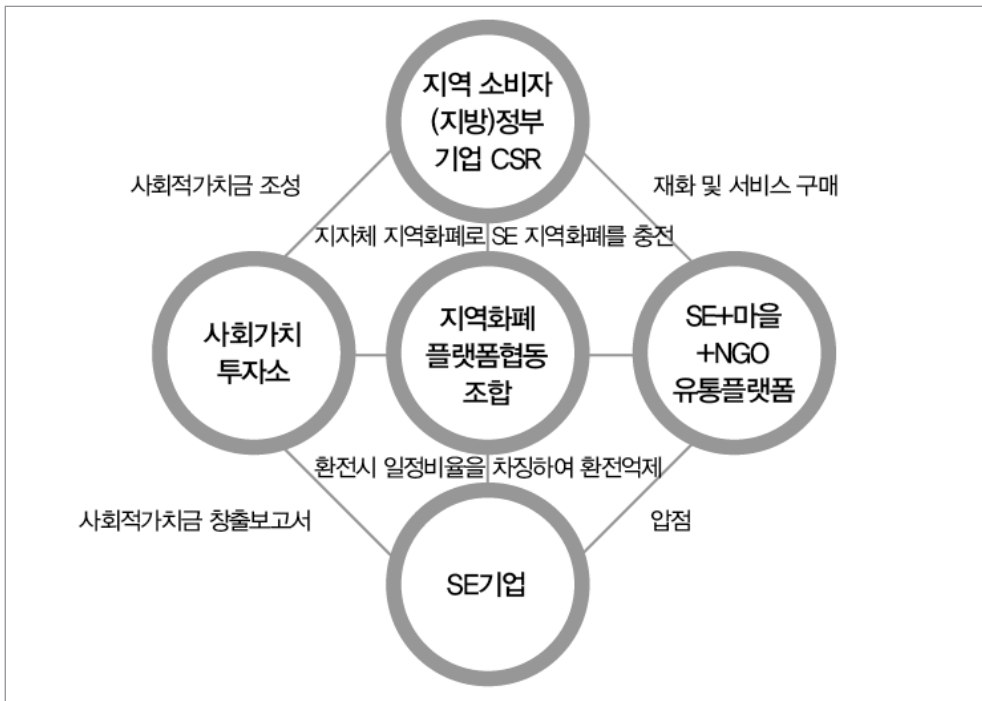
- 한발레츠를 기본모델로 전자지갑 개발
- 전자화폐와 공익기부를 할 수는 포인트로 전자지갑 구성  
(추후 다양한 지역화폐 종류를 추가로 넣을수 있도록 확장성 고려)
- 주요기능

구분	소비자	운영기관
가입	회원가입 요청	회원가입 승인처리
	지역화폐 지갑생성(Wallet)	회원정보 및 현황관리(신규, 휴먼, 탈퇴)
발행	무통장 발행 요청	발행승인처리, 발행내역관리
	발행승인시 2% 기부화폐 추가발행	발행현황통계
거래	이용자 거래 QR코드 생성	거래내역관리
	QR코드 스캐너	거래현황통계
환전	이용자 환전요청	환전승인, 환전내역관리, 환전현황통계
기부	기부 프로젝트 목록	기부 프로젝트 관리
	관심 기부 프로젝트에 기부하기	기부 현황 관리, 기부금 정산처리

〈그림 2〉블록체인 기반 호혜거래 시스템의 기본 운영정책

## 2. 민간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운영주체와 수익모델

민간지역화폐는 민의 상호자조와 자기책임, 민주, 공정, 연대의 협동조합의 가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전의 지역화폐 프로젝트는 그 운영기관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하고자 한다. 소비자, 가맹점,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최근 플랫폼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이다. 벤처캐피탈이 주도하는 디지털기술과 결합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시장의 강자가 되어가지만 그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이번 산자부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단체가 아닌 지역화폐 플랫폼을 참여하는 기업들과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동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한 살림대전생협과 품앗이생협의 식품매장 10곳과 민들레의료사협의 의료기관 4곳, 커뮤니티케어 협의회 30개소 등을 포함하여 2019년대 100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간 협동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일정 지원을 받더라도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갖추고자한다. 이 수익모델은 공공시장과 경쟁시장, 관계시장을 모두 활용한 복합경제모델에 따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동시에 연대와 협동의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3〉블록체인 기반 호혜거래 시스템의 복합경제운영 모델

## IV. 마치며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시작한 지 두 달 만 1천억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다고 한다. 평균 8%의 할인율을 생각해보면 8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 외에 운영대행기관 등에 드는 비용과 제반 인프라 비용까지 하면 100억원 내외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점이 든다.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부를 흡수하고 있는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 설사 경기도에도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100억원을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에 써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민이든 관이든 지방소멸의 위기에 맞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이것이 한때의 유행에 그치거나 특정 정치인의 정략적 도구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근본취지와 원칙을 지키는 민간주체 중심의 건강한 지역사회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화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사회목적의 수단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지역화폐는 단지 특정지역 결제시스템을 넘어 지역 사회 기반 마을공동체와 산업생태계가 순환과 공생의 원리로 지켜지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 민의 자발성과 자율성, 호혜의 연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깨어나라 협동조합의 저자, 김기섭이 협동조합의 선구자인 로치데일공정개혁자조합의 시사점을 상기해 보자면, ①민의 상호자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②소비의 조직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③조직화된 소비의 힘으로 생산을 재조직한다는 것, ④조직된 소비의 변화된 생산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지역사회 이행전략을 곱씹어본다.

지역화폐 유행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시대, 대전의 시민은 자조와 자기책임, 민주주의, 공정, 연대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되새기며 민간중심 대전형 지역화폐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대전세종 시민에게 동참을 부탁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박용남(2005), 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 녹색평론 9-10월호(통권 60호)
- 김성훈(2006), 세계 지역통화 활동가로부터 온 메시지, 계간 환경과 생명, 2006년 겨울호(통권 제50호)"
- 김성훈(2010), 지역통화 운동의 의의와 실제,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 김성훈(2010), 호혜시장은 이미 부활하고 있다. 씨알의소리
- 김성훈(2019), 지역화폐와 호혜시장 활성화전략,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총회자료집(2019), 한발레츠 홈페이지 자료실, 지역화폐 거래현황  
<http://www.tjlets.or.kr/bbs/board.php?id=study>
-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5년, 2019년 총회자료집, '품'화폐 발행 현황
- 문진수(2017), 지역화폐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 박경(2012),우리나라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산업연구원 계간지역경제 통권 제29호
- 박진경·김선기(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노컷뉴스(2018)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https://www.nocutnews.co.kr/news/5043004>
- 김가우어 통계 2003-2015년,  
[https://www.chiemgauer.info/fileadmin/user\\_upload/Dateien\\_Verein/Chiemgauer-Statistik.pdf](https://www.chiemgauer.info/fileadmin/user_upload/Dateien_Verein/Chiemgauer-Statistik.pdf)
- 위키피디아, 플랫폼 협동조합, [https://en.wikipedia.org/wiki/Platform\\_cooperative](https://en.wikipedia.org/wiki/Platform_cooperative)



### 편집위원

**위원장** 박노동(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위원** 박근수(배재대학교 여가서비스경영학과 교수)

설성수(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운정(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범규(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남석(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충만(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윤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현(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70호

**발행일** 2019년 9월 2일

**발행인** 박재묵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2

**주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제작**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Tel.042-633-7800)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 연구과제 제안 안내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세종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http://www.dsi.re.kr)) 시민의소리(연구제안)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http://www.dsi.re.kr)